第256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8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11月3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한 유아교육대책에 관한 보고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4. 2006년도 예산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6. 高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7.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審査된案件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
2.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한 유아교육대책에 관한 보고 ····· 2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6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4. 2006년도 예산안 ····· 6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6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20
6. 高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권철현·맹형규·박세일·박순자·박재완·박찬숙·박창달·안상수·안택수·엄호성·원희룡·유기준·윤건영·이근식·이윤성·이해봉·이혜훈·정문헌·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 20
7.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0
8.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0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1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4. 2006년도 예산안(계속) ····· 21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21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최시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0월 31일 맹형규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함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새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한나라당에서 요청해 온 대로 새로 오신 임해규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한 유아교육대책에 관한 보고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산·고령 사회를 대비한 유아교육대책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비한 유아교육대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16명으로 사상 최저로 떨어졌고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진행되고 우리 경제·사회 운영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는 저희 부에서는 늘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으며, 저출산대책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시발점은 바로 영·유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유아교육 대책으로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그리고 만 3세아, 4세아에 대한 소득수준별 차등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또 유치원의 종일제를 확대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등을 중점과제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학교정책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유아교육대책(안)을 중심으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취원 현황은, 취원 대상 아동 3세부터 5세까지 약 70.1%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취원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세아의 경우는 유치원에 7만 4824명, 15.2%가 취원하고 있고, 보육시설에는 46.8%가 취원하고 있습니다. 5세의 경우에는 유치원 45.4%로서 보육시설의 30.4%보다 높은 취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치원 현황을 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설 유치원 4336개, 단설 유치원 76개를 포함해서 국·공립에 4412개 원이 있고, 사립이 3836개 원으로서 총 8275개 원이 있습니다.

교원 수 현황을 보면 국·공립에 병설과 단설을 포함하여 6796명, 사립에는 2만 4151명으로서 전체 3만 947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일제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62.5%의 국·공·사립 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

니다.

유아교육은 총예산이 7190억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립 5592억 중에서 국고가 73억, 지방비가 5419억이고, 사립 1667억을 포함해서 7190억입니다. 그 중에 국·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는 국고지원율이 50%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871억에 대한 사업별 예산 내역은 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비가 금년에 835억 6500만 원, 유치원 운영 지원이 24억 2300만 원, 유아교육자료 및 홍보비가 11억으로 되어 있었고, 내년도 예산은 유아교육비가 1976억 7700만 원, 유치원 운영 지원이 22억 6700만 원, 유아교육 자료 및 홍보가 약 1억 9000만 원으로서 내년 예산 총계는 2001억 34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만 5세아 무상교육 실현과 학부모 육아비용 경감, 유치원 공교육화 확대, 유치원 보육기능 강화를 통해서 누구나 만족하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서 미래세대를 육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동등한 기준에서 지원하고 아동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프로그램별 지원도 병행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황은 양질의 취학 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 공교육화 및 교육 출발점 평등을 구현하고, 전체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의 자녀이며, 지원 내용은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내용은 재정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미래 인적 자원 개발, 초등학교로의 교육 연계를 위해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칭하는 것을 2010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현황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서 2010년 전면 실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만 3세아, 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이하의 자녀이며, 지원 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차상위계층은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2005년 현재에는 약 3만 9000명, 총 163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육을 포함하면 3, 4세아 전체에서 약 18.4%의 유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저희가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2007년에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내용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만 3세아, 4세아 교육비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이것은 200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 교사와 공립유치원 교사와의 임금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립유치원 교사가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반 인건비보다는 우선적으로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보조금이 도입될 때까지는 최소한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만이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담임수당을 월 11만 원씩 농어촌지역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요예산은 농·산·어촌 대상 2000명으로 할 때에는 13억 2000만 원, 2007년에 중소도시까지 확대할 경우에는 1만 1300명에 74억 5800만 원이 소요되고, 2008년에 대도시까지 전면 확대하여 2만 3000명에 대해서 할 때에는 18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은 표준교육비나 보육비 적용 시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또 표준교육비·보육비와 부모부담액의 차액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용 아동 수에 비례해서 시설로 직접 지원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주요 쟁점으로 2007년부터 민간 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을 도입하는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립유치원은 가격이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은 가격이 규제되어 있어서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은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은 사립유치원에도 민간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기본보조금 도입을 추진하고, 사립유치원에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면 유치원을 선택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대규모 민원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도입 시 지원 조건은 수업료 규제 및 평가 인증을 실시해서 유치원도 가격규제 속에 집어넣어서 기본보조금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치원 종일제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10시간 이상 종일제 운영을 요구하지만 전담교사 배치나 환경 개선 미흡으로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일제에 참여하는 원 수가 62.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의 보육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형편입니다.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종일제 운영을 전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2005년 62.5%를 2008년까지 80%, 2010년에 전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와 프로그램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도교육청 평가 시 종일제 운영 여부를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해서 시·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재원 확보방안은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재원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 방안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일반 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보 전략은 가칭 출산장려세 신설 시 소요재원을 활용하는 등 국고는 저출산 종합대책에 반영해서 신규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지방비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 교육감 선거인단에 유치원과 교직원, 학부모를 포함하는 방법을 도입해서라도 시·도교육감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저출산 종합대책, 2차 인적자원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과 기능별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기에 질의에 들어가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은 예산국회인 고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질의는 그 후에……

○진수희 위원 위원장님, 저는 저출산 종합대책에 관해 현안보고를 요구했던 위원의 입장에서……

○위원장 황우여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제가 오늘 현안보고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입장에서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부총리가 한 시간 후에 자리를 뜨셔야 되고, 부총리 계실 동안 예산에 관해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한 시간 후에 자리를 뜨셔서 오후 내

내 오시지 못하는 사정이라면 질의를 처음 부분에 하시는 위원들은 부총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다른 위원들의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의사일정 제2항을 순서대로, 질의하는 순서를 예정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간사님들 협의를……

정봉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진수희 위원님께서 모르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현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 회의에 앞서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자, 여기까지가 합의된 것이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5건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당 간사인 제가 합의를 안 해 주었으면 불가능했던 것이거든요.

○진수희 위원 그렇게 길게 얘기하실 상황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단……

○정봉주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상황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길고 짧은 게 뭐가……

○진수희 위원 그 상황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끊어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의사일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린 것이냐 하면, 본 회의에 앞서서 현안보고를 받자라고 한 것은 본 회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간단한 차원에서 받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예산국회입니다. 부총리님께서 나가서 예산을 먼저 하자는 게 아니고 예산국회니까 지금 이 현안보고를 간단하게 받자라고,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받고 현안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하자고 하는 것에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부분이 본 예산 문제에 대해 대체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면 앞으로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합의해 주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감안하시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산 문제에 대해서—오늘 메인이 그것입니다—충분히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하고 대체토론을 하고 나서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질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께서 오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뭐라고 제안했느냐 하면 저것을 하고 한 분 정도의 위원님만 질의를 합시다, 그랬는데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고요.

저는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제2항에 넣자고만 합의를 했지. 그러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국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체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갖고, 향후에 저 부분에 대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진수희 위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위원장 황우여 예, 말씀하시지요.

○진수희 위원 제가 엊그제 상임위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세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설사 오늘 업무보고만 합의를 해 주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형식을 빌려서 업무보고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봉주 위원 진 위원님, 질의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위원장 황우여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유아교육 대책을 우리가 현안으로 채택해서 듣는 것은, 그 보고의 태반이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시급한 유아교육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두 성격의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성격의 보고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수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 간의 협의를 거친 바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전체적인 예산 틀 안에서 예산도 논의하고……

그리고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대책에 대해서는 예산과 아울러 유아교육

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질의가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순서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을 먼저 해도 다름이 없습니다마는, 모처럼 양 교섭단체 협의가 마쳐졌으니까 진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일반예산의 전체적인 틀을 검토한 다음에 그 틀과 아울러 유아교육 대책에 대한 예산과 나머지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진수희 위원 그러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오늘 잠시 후에 자리를 비우시면 오후에 돌아오실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오늘 오후에 일정이 죽 이어져서…… 오전 중에는 제가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런데 오후에는 못 돌아오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 세션 끝내고 유아교육과 관련해서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될 때 부총리는 계실 수가 없는 사정입니까?

○지병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아니, 발언 중입니다.

진수희 위원님, 발언 마치셨습니까?

○진수희 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지금 확인…… 그런데 답변을 아직 안 주셔서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오후 행사가 한 7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오전 중에는 몇 시까지 여기에 재석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12시까지는……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간략하게…… 예산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5분 질의를 협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잠시 확인하실 것은 확인하시고 중점적인 것은 차관 재석 중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희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위원장 황우여 진수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간사 협의가 마쳐졌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좀 조화롭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에 또 보충질의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요?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감사합니다.

○지병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얘기 또 하시겠습니까?

○지병문 위원 예.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우리 의사일정이 며칠 전에 정해져 있던 것이 지금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고……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다 배포되어 있고, 이것이 그전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교육부 보고를 5분 정도에서 다 끝내세요. 그리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서 진수희 위원님 시간에 그 부분 다 질의하시고 다른 분도 필요하면 부총리님이 계실 때 12시까지 할 것을 다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황우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고 후에 질의를 잠시 중지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부터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4. 2006년도 예산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10시33분)

○위원장 황우여 의사일정 제3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편성된 내년도 교육예산에 대해서 국회가 심의하는, 국민들의 모든 관심이 우리 상임위에 모여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교육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예산액보다 5.2%가 증액된 약 29조 420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규모는 정부예산 전체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재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어 있는 이러한 막대한 교육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와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17대 국회 전반기를 마치는 마당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임무는 교육에 있어서, 특별히 고등교육과 유아교육, 그 밖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교육, 또 평생교육과 같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고등교육 예산 확보와 유아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심의에 초점을 맞춰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진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되,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주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효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당초 예산보다 4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하반기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세수 결손을 보전함으로써 금년도에 계획된 예산 지출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부의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경기부진에 따른 교육세 세입 감액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5년도 상반기 교육세 징수 실적이 전년 동 기간 대비 99.3% 수준으로서 당초 교육세 세입액 4조 2475억 원에서 금년도 세수 결손 추정액 4732억 원을 감액한 3조 5040억 원으로 교육세 세입을 경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2005년도 우리 부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732억 원이 감액된 3조 8362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세수 결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되기 때문에 규모상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21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저희 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현 국제교육정보화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기부진 등으로 교육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에 따른 2004년 결산잉여금 3074억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4.3%가 증가된 4조 49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 증가된 29조 42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성과중심 체제로 전환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틀 속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재정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06년도 예산안에는 우리 부의 주요 기능을 감안해서 고등교육 부문, 평생·직업교육 부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대비 4.5%가 증액된 3조 6178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에는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예산 1조 716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 예산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양성과 교육과 연구력 향상을 위한 제2단계 BK21사업에 3000억 원,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사업 추진에 2910억 원을 계상했고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에 2700억 원, 대학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대학구조개혁에 8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국제 수준의 고등교육평가체제 확립을 위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에 52억 원, 대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융자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에 149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의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며 국제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6%가 증액된 2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기반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34억 원, 전문대학을 중추적인 직업교육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에 1680억 원, 교육의 국제화 및 재외동포 모국 이해 교육에 7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학교 지원, 유아교육 확대 지원 등을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조 8530억 원을 포함해서 전년 대비 5.3% 증액된 25조 53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아의 무상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에 2001억 원, 장애아 교육 지원에 142억 원,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43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에 79억 원, 역사왜곡 대책 및 한국 바로 알리기의 체계적 대응 지원에 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6년도 우리 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 소관 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등이 있으며 내년도 운용 규모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조 1831억 원, 사학진흥기금 1760억 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2987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시는데 시간을 10분 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정책홍보관리실장입니다.

먼저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2005년 본예산 134조 4000억 원보다 0.9% 증가한 135조 50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05년 본예산보다 0.1% 증가한 60조 6000억 원으로 총계는 2005년 본예산 195조 원보다 0.6% 증가한 196조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 0.6% 증가한 196조 1413억 원이며 교육 부문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1% 감소한 3조 8362억 원으로 교육세에서 4732억 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 결손 예정액 6534억 원 전액을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므로 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수 결손 내역은 내국세교부금에서 1802억 원, 교육세교부금에서 4732억 원입니다.

교육세 감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중에 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부족이 전망됨에 따라서 교육세 세수 결손 추정액 4732억 원을 감액하고 세수 결손 전액을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세교부금 결손액 1802억 원을 포함해서 총 6534억 원이 교부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안, 2006년 교육예산안 편성 방향, 2006년 교육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 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생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교육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교육복지 확충,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등 정책 목표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국민 편익 조기 제공을 위한 BTL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산업 수요와 연계된 다양화·특성화된 대학 육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의 학술·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 복지 지원 확충을 위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국제교육 부문에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추진 체계 핵심과 직업교육 내실화 추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확충, 그리고 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자 중점 지원,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히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소득 간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 소득과 지역 간 교육격차,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교육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45조 7000억, 특별회계 57조 4000억 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2005년 167조 3000억 원보다 5.5% 증가한 176조 5000억 원입니다.

교육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이 전년보다 4.3% 증액된 4조 4959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4049억 원, 특별회계 9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보다 5.2% 증가한 29조 4263억 원으로 BTL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6.6% 증가한 32조 10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 증가한 28조 8275억 원, 특별회계 예산은 10.1% 증가한 5988억 원입니다.

부문별 주요 사업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3조 6178억 원을 계상해서 2005년보다 4.5%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과 지방대 지원 강화, 학술연구 지원 및 대학생 복지 확대, 국립대 운영 및 시설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생·직업·국제교육 부문에서는 전년도보다 4.6% 증액된 2713억 원이 편성되어서 평생 및 직업교육 진흥, 인적자원 개발 및 국제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서는 전년도보다 5.3% 증액된 25조 5371억 원이 편성되어서 유아 및 특수교육 중점 지원, 농산어촌 여건 개선 지원, 그리고 전국의 초·중등학교 운영을 위한 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BTL사업도 25.5% 증액된 2조 6760억 원을 투입해서 초·중등학교 시설여건 개선과 국립대 기숙사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2006년도의 지방교육재정 현황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계를 해 보건대 세입·세출 공히 37조 4089억 원으로 2005년 대비 5.4% 증가하였고 세출 부문의 세출 내역은 인건비가 23조 3954억 원, 학교운영비가 2조 9024억 원, 교육사업비가 3조 27억 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인건비는 국립교육기관 총 정원 2만 9709명분으로 1조 4625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본사업비는 2536억 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4조 8530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사업별로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4670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2단계 연구중심 대학 육성에 3000억 원이 계상되어서 지식기반사회 대비 연구중심 대학 육성 등 고급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대학구조개혁에 800억 원, 대학 특성화 지원에 6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육성에 7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전환대학에 교육과정 개발비, 실험실습 장비 구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에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학적성시험 개발 및 시행에 사용되게 됩니다. 고등교육 평가체제 확립 및 운영에 86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에 신규사업으로 100억 원이 계상되어서 긴급한 인력 수요가 있는 성장동력 분야에 지원코자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강화에 33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으로—균특회계입니

다—2700억 원이 계상되어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토대 마련에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지원에 균특 자금으로 500억 원이 계상되어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에 300억 원, 학교기업 육성에 150억, 전문대 해외인턴십 지원에 20억, 커넥트 코리아에 신규사업으로 30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지방 연구중심 대학 육성에 균특자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의 우수 이공계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실장님, 지금 고등교육 부문만 해도 앞으로 상당한 분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 분야를 정리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시고 마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수입계획은 자체수입이 2조 5685억 원이고, 내역은 재산수입 3402억 4600만 원, 융자금 회수에 1조 1971억 원, 연금수입 및 법인세 회수 등에 1조 311억 원이 계상되었고, 정부내부 수입으로 5404억 원, 기타 여유자금 회수에 3조 741억 원 등 총 수입액이 6조 1831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에 2조 3992억 원을 계상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폐질 시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영비에 309억 원을 계상했고, 정부내부 지출에 650억 원,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 등에 3조 68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기금도 중요한 부분은 마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마감을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는데 간략히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안과 200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195조보다 증가한 196조 1000억이 계상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05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11%가 감액된 3조 836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내국세교부금 감액분 1802억과 교육세교부금 감액분 4732억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 결손 예정액 6534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세가 특별소비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민감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교육세의 결손은 교육세의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추계의 방법에 있어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측면에서 세입예산안은,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4조 4959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4조 4049억 원과 2개 특별회계 910억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반면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29조 426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조 8274억 원이며 5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5988억 원에 해당됩니다.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2006년도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의 부문별·기능별 규모 및 회계·기금 상호간의 관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별·부문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개괄적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교육세는 1762억 원이 감소한 3조 80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세는 매년 예산액과 징수액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

하고 있는바, 2006년도 교육세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추경예산안보다도 35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교육세가 특별소비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수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세입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고등교육 부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 평생·직업·국제교육 부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 부문의 예산으로서 3조 6178억 원을 편성해서 교육부 예산의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고등교육 부문 신규사업 및 지원중단 또는 종료사업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2단계 연구중심 대학 지원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05년도까지 7년간 연 2000억 원의 규모로 시행되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서 실시되는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연 3000억의 예산으로 총 2조 100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의 사업 방식 및 사업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인건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는데 그 타당성·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2단계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한정된 국가예산하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2단계 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단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000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는 2단계 사업비는 이와 같은 사업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8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기존 대학에 대한 지원액 500억 원과 신규 통·폐합대학 및 구조개혁선도대학에 대한 지원액 3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어느 대학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지 불확실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세부 사업 간의 예산비율 또한 불확실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더 이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특성화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비교우위 분야의 특성화 추진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6년도에 6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다년도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하였다고는 하나 자유과제의 경우 여전히 3분의 1을 단년도로 지원하고 있는바 전체 사업을 다년도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4년도 결산에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민간경상이전과목으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지원받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자본적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통제를 엄격히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예산안은 25조 5148억 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의 88.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내국세의 19.4%에 해당되는 금액과 교육세 전액으로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2006년도 예산안은 24조 8530억으로서 전년 대비 4.7%가 증액된, 1조 1163억이 증가됩니다.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재 정부 예산 편성방식이 톱다운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저조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많이 확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적극적 투자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직업·국제교육 부문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2713억 4900만 원이 편성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의 0.9%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등단계 직업교육 체제혁신 지원사업은 침체 상태에 있는 전문대학의 혁신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대학 간 협약학과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에 2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경우는 추구하는 목표에 비해서 지나치게 작은 예산만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방안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예산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과 관련해서 재정융자특별회계는 300억 원으로서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융자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고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690억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세입예산으로 690억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서는 57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총 432억 원이 계상된바 이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전체 재원의 1.55%에 해당된 수준으로서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는 4개 사업에 총 49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은 지역 발전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으로서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100억 원을 포함해서 300억 원이 증액된 27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유형이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단 수가 지나치게 많고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소형사업단의 별개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이는 세입예산으로 218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세출예산으로 21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유학사업의 경우는 1개국에 집중 편중된 그러한 입장을 배제하고 여러 국가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후 부문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총 수입·지출 규모가 6조 183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3.2%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급여제도에 대한 개선과 두 번째 금융상품 부문의 효율적 투자를 위한 자산운용부서의 책무성 강화와 자산운용의 다각화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재정안정화 방안 모색으로서 연금수급구조의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와 책임준비금 확보를 위한 계산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학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수입·지출규모가 176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학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첫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융자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했고 두 번째 재특예수금 상환부담 가중에 대한 대책 필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행 재특예수원금이 지원되는 재특예수금보다 현재 웃도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순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자체 수입의 기반이 없는 동 기금의 특성상 기금사업의 위축이 우려되는바 재특예수금 상환부담 가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은 학술 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도에 제정됨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으로서 2006년도 수입·지출 규모는 2987억에 해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상 대학생 학자금에 대하여 신용 보증을 하는 보증공급의 규모는 1조 5000억이 설정되어 있는바 아직까지 신용보증방식의 학자금대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무리하게 보증공급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엄격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보증사고율 및 대

위변제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는 향후 정부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기금운용의 1차 연도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의 적정운용배수 및 이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양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안보고하고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봉주 간사께서 현안보고에만 의사일정 합의를 해줬지 질의까지 합의해 준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참 말씀이 안 되는 게요. 업무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국회가 통법부가 아닌데 질의 없는 업무보고만 의사일정에 넣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사일정 합의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만 갖고도 15분도 부족한데 저는 저출산 종합대책하고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저출산 대책하고 관련해서 유아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종합대책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반발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뒤늦게 급조하신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진수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뒤늦게 급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종합대책을 작업하는 위원회나 실무팀에 교육부에서 참여하기는 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진수희 위원 누가 참여했습니까? 참여했는데 초안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가서 뭐 했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요.

○진수희 위원 아니 지금 경위를 누가 갔는지, 작업을 했는지…… 도대체 누가 가서 작업을 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웃풋(output)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대책 중에 만 5세아, 3~4세아에도 다른 대책들은 이미 그동안 위원님들께 죽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진수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기본 보조금에 왜 사립유치원이 제외되도록 발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확정단계에서 확정된 정부정책이 발표가 된 것이 아니라……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은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부 부처 안에서 상당 부분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접근해 가고 있고 또 열린우리당과 정부 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보고를 드려야 되어서 그 부분만을 이런 안으로, 검토안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최근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현장에서 우리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는가, 이렇게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교육을 할 생각이 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최초 안, 이런 것을 보면서 신고제로 되어 있는 민간 보육시설에는 기본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인가제로 되어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배제하는 것, 이게 부총리께서 늘 형평성 강조를 해 오셨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대단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저는 물론 보육시설 지원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 최초 안을 보면서 바로 불과 얼마 전에 부총리께서 주고 싶어도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때문에 주기 어렵다 또 최근에 경기도 수원시에서 유치원 관계자하고의 면담에서 지원약속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게 불과 국감 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도 채 못 되어서 나온 정부 종합대책 안에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교육부나 부총리께서는 뭘 하고 계셨는지,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분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데에는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리고 저는 수차례 지적하고 강조를 했지만 지금 유치원 지원하는 이 문제는 종합대책 이전에 지금 있는 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새로운 정책판단 사항도 아니고 정책적인 선택사항도 아니고 현재 있는 유아교육법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로울 것도 없어요.

유아교육법에도 지원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제가 수차례 반복해서 지적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부총리께서는 재원 확보를 핑계로 알면서도 계속 놔두고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법을 집행할 위치에 있는 정부부처에서 법을 안 지키고 법이 충돌되는 부분을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 당장 충분한 지원은 어렵더라도 상징적으로라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불어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서 법 시행령 충돌되는 부분을 빨리 고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부분은 부총리께서 책임지고 정부종합대책으로 확정지으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오늘 보고한 부분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수희 위원 애초에 초안으로 발표되었던 부분하고 차이 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진수희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하신 대로 관철시킬 자신이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정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을 얼마만한 크기로, 예를 들면 3조부터 7조 사이에서 얼마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 주는 것은 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표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주장……

○진수희 위원 왜 사립유치원의 경우만 문제되니까 재원 얘기를 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 얘기도 좀…… 제 답변을 들으시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고요.

○진수희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부 내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수업료가 규제되고 있고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규제를 받고 있는 보육시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제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는 사례가 많이 있고 또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자율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감들에 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보육료를 조사해 보면 시장에서 수요에 따라서……

○진수희 위원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총리실에서 일부 실무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방향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열린우리당의 지병문 위원께서 나서셔서 조율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상당히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의 법령상 차이 문제는 조속히 법령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고등교육 부문에서 예산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2단계 BK21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잘 아

시다시피 1단계 BK21사업이 지난 7년간 무려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1단계 사업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체평가하고 그다음에 외부평가가 두 군데인데, 외부평가라고 해도 국무조정실은 거의 자체평가나 다름없다고 보고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평가한 정도가 고작입니다. 저는 이 정도 평가를 근거로 해서 향후 7년에 걸쳐서 2조가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늘 BK21사업의 성과를 대학의 논문 수가 증가한 것과 연결을 짓는데 사실 대학의 논문 수 증가는 BK21사업의 효과뿐만 아니고 과기부라든지 정통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BK21사업의 순효과로만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사업을 평가하려면 이 사업이 원래 목표했던 것,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목표가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수준의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을 통한 우수한 R&D인력 양성, 또 사업분야별로 2005년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해에 선진국 TOP10 수준 대학원으로 진입시키겠다, 그다음에 대학학사제도 개혁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인데 세 번째 것은 제쳐 놓더라도 첫 번째 우수한 R&D 인력 양성하고 관련해서 과연 그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상자들, 석·박사 과정에 있었던 학생들이 현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있나 없나만 말씀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자료 제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인적자원부BK21기획단장 엄상현 각 사업장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교육인적자원부BK21기획단장 엄상현 예, 알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적어도 세계 TOP10 대학원으로 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대학이 있습니까? 분야별로 최소한 한 개씩은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작 서울대가 최근에 100위 안에 겨우 턱걸이 한 정도인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보기에 따라서 이것만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7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희 위원 강화는 다소 됐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1조 7000억 원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엄밀하고 냉정하게 평가하시라 이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했던 그 어떤 재정지원사업보다 더 객관적으로 다양하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진수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양하게 평가 안 하셨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만족하실는지는 몰라도 국무조정실이나 예산정책처 평가 말고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여러 차례 평가했고 그것을 가지고 대학교의 전문가들과 함께 몇 차례 포럼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1단계의 평가를 통해서 나온 문제들을 2단계 사업에 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진수희 위원 저는 1단계 평가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고요,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내용들도 보면 제대로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엄밀하고 냉정하게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부터 제대로 충분히 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에…… 1단계 사업이 이루어지고 2단계 사업을 꼭 연이어서 공백 없이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부터 우선 엄밀히 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시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분야의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에 10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과 현재 산업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NURI사업이랄지 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하고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체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를 만들겠다고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NURI사업이나 산·학·연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굳이 3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등단계 직업교육체제 혁신 지원 20억 이것도 내용을 보면 실업고등학교가 연계되는 것 이외에 NURI사업이라든지 산·학·연 협력체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중심대학에 30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대학과 기업 간의 상생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NURI사업하고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등교육분야 신규사업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고등교육분야의 예산안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아무리 다름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차별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NURI사업, 대학특성화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면밀히 평가하고 산업체는 물론이고 산자부나 과기부, 정통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 양성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부처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보완한다면 신규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예산을 책정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고등교육분야 예산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구조개혁 예산으로 80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여수대에 85억, 부산대·밀양대가 145억, 그리고 경상대 6억, 올해 책정되었던 800억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배분되었는데 이렇게 배분한 지원액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 대학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재정소요 총액이 3500억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렇게 배분해 준 기준을 모르겠고 그다음에 대학이 원하는 금액하고 교육부가 지원한 금액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보면서 과연 구조개혁에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에 맞추는 구조개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공주대-천안공대 같이 이미 통합이 완료된 대학을 대상으로 최소한 1년 단위라도 성과분석과 더불어 과연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요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에 따라 대학별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 800억 예산 놓고 원하는 대학 죽 놓고 적당히 나누어주는…… 예산 나누어주면서 이 예산에 맞춰서 구조조정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조개혁하겠다 혹은 통합하겠다고 했다가 결렬시킨 대학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패널티를 물어야지 통합하겠다고 했다가 결렬한 대학들을 다시 구조개혁선도대학으로 선정해서 구조개혁에 책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해 주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2007년도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언론에 오보가 나간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오보라기보다 총리실의 일부 실무자들이 워낙 재원 조달이 힘든데 사립유치원은 그나마 보육료가 자율화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보육료를 올려서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더 많이 다니는 보육시설에

기본보조금을 우선 지급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자 이런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능을 하는 시설들을 그렇게 불합리한 사유로 차별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유아교육시설 자체의 존폐 문제를 야기하게 되니까……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 방침은 기본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같은 기준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위원 그렇지요.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결론은 기본보조금을 2007년도에……신문에 보도되어 가지고 사립유치원에서 반발한 것이 이렇게 차별을 두면 어떻게 하냐인데 교육부 방침은 어쨌든 그런 방향은 아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정봉주 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가 많이 남은 것은 아니니까 기본보조금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일괄 지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정봉주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182개로 시·도교육청에 다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정봉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지방교육재정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운영예산이요.

○정봉주 위원 아닌데요, 이것이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 등의 주요과제로 선정되면서 국고에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방에서 나가나요? 지방교육재정에서 나갑니까? 국고 50% 대응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국고에서는 농특회계에서……

○정봉주 위원 농특회계에서 농어촌 지역 90개에 나가는 것 말고요, 182개 지역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6개 시·도에 2개씩 해서 32개의 지역센터당 1억 4000만 원 하게 되면 한 44억 8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배정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삭감할 데가 있는데, 고부가가치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에 100억 배정되어 있지요? 제가 통계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정봉주 위원 100억 배정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4년제 대학에서 1년간 특별 양성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디지털 콘텐츠 등 일부 사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인력이 과잉 공급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중복 투자가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인력입니다.

또 하나 필요 없는 교육 과정인 이유가, 지금 현장에서는 연구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은 생산 인력 교육 과정입니다. 지금 100억 배정되어 있거든요. 이 특별 양성 과정은 전면 삭감해야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인적자원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10대 성장동력 인력 수요를 산업계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인력 수요가 있는데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 양성이 안 되고 있다……

○정봉주 위원 그런데 교육부의 2005년 정책연구자료를 보면 연구 인력이 필요한데 특별 양성과정은 생산 인력이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래서 기존에 선수 과목을 다 공부한 학생들을 1년 동안 모아서 가르쳐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산자부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 예산에 집어넣은 것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정봉주 위원 중복 투자 과정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교육부에서 삭감하시려면 적어도 예결위에서 산자부와 교육부가 함께…… 이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이 어디든지 반영은 되어야 될 겁니다.

○정봉주 위원 이렇게 하세요.

교육부에서 실링 주고 톱다운 방식으로 내부에

서 횡격막을 뚫고 왔다갔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정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확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잘 타산해서 일정 정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잔여 예산은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내의 정책연구 자료와 지금 현재 나온 예산과 아귀가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아예 항목을 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학에서 산학 협력을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지원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기업들이 생각할 때 대학이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보다 너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해서 돈도 사람도 제대로 투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상의 격차를 빨리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이런 정도 지원을 하면 그것에 따르는 기업의 대응 투자가 더 크게 일어나 가지고, 그것으로 필요로 하는 산업계 수요에 단기 양성을 통해서 공급해 줌으로써 산학 협력에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초점은 예산이 과다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좀 줄여 보시고요.

그리고 직업교육 예산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정봉주 위원 직업교육예산이 전년도에 1140억이었는데 올해 990억으로 148억이 순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이양되면서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것이지요.

늘상 우리가 강조하지만, 보편화 교육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영재교육과 직업교육, 특성화교육이 세 날개로 날아 줘야 되는데 이 직업교육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다소 낮으니까, 이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지방교육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만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늘상 부총리님도 강조하신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 예산에서 올해 순 감소한 부분이 148억인데 원래 처음에 교육부 내부에서 한 45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148억과 450억 사이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그러니까 지금 60개 있는 특성화 학교를 2010년까지 한 200개 정도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직업교육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지방 이양으로 됐다고 해서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맡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꾸만 줄여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래서 직업교육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제대로 늘려서 취지대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교부금 같은 것을 지원하는 데 차등화해서 그런 부분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부족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과 기업체를 연계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아까 진수희 위원님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정봉주 위원 그것은 필요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전문직업 실업교육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근 70%가 대학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중소기업체와 전문대학과 실업고등학교가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위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정봉주 위원 그다음에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지방대학을 돌면서…… 누리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누리사업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250억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어요.

뭐냐 하면 매년 연간 2400억씩 나가는데 이 예산을 점검해 보다가 문제가 되어서 탈락된 사업단들도 있거든요. 탈락된 사업단이 있으면 새롭게 여기에 추가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 갖고 누리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 또 250억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250억 순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겠지만 누리사업에서 250억 예산 순증하는 부분을 기존에 있던 계속사업 분야에만 맡겨 놓으면 250억 정도를 다른 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누리사업은 국가 역점사업이긴 하지만 기존의 사업을 엄밀하게 점검하면 이 정도 효과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청하고요, 삭감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드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유아교육 재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부총리님, 4세 유아들 중에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까 보고드린 안건에 나와 있습니다.

○정봉주 위원 2만 2000명입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8만 이삼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배거든요. 그러면 4세 유아교육의 중심축은 사립유치원에 가 있지요.

그다음에 5세 중에 국·공립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7만 명 정도 되지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20만 명 됩니다.

그리고 교원 수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는 아까 보고자료 1페이지에……

○정봉주 위원 2만 3000명이에요. 국·공립유치원에 6700명이에요.

그리고 2003년 통계에 보면 학생 1인당 지원금이 국·공립유치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

○정봉주 위원 239만 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얼마인지 아세요?

6만 7000원이거든요. 40배입니다, 40배.

제가 앞의 통계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4세 유아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4배, 5세는 3배, 그리고 교원 수 3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40분의 1……

우리 당 위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위원들도 계속 이 인건비 지원을 늘려라, 그런데 기본보조금이 2007년부터 나가게 되면 2007년부터 기본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책적 확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내년도가 문제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데, 과도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교원 인건비를 11만 원씩 책정하게 되면 학생 일인당 혜택은 6만 7000원에서 16만 원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국·공립유치원에 비해서 1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교육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 양극화가 여기서 빚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에 5년 미만 근무하는 교사들의 연봉이 1200만 원입니다. 국·공립유치원 2300만 원이에요. 급여도 51%예요. 이런 양극화, 이런 교육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우리 교육의 미래는 유아교육에 있다? 유아교육법을 왜 통과시켰습니까? 이거 이제 얘기하기도 아주 힘이 들어요. 수백 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예산 편성 좀 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정부안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주장을 해 오다가 결국 힘이 부족해서 관철을 못 시켰는데, 저는 정봉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전체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의 77%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유치원 교사들의 봉급 기준으로 할 때 반 정도, 그러니까 국·공립은 200~220만 원 받는데 사립은 80~120만 원 받는 현실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77%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 때문에, 기본보조금은 재원조달 계획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전체를 다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소득 수준별로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하면서 그 전까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봉주 위원 지금 배정되어 있는 13억 정도가 안으로 올라오고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항목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정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이 교육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들어가시거든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교육부 예산 심의는 난항을 거듭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정부 부처 내에서 정확한 가르마를 타서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면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1시44분)

○위원장 황우여 그럼 잠시 시급한 의결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중지하고,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추가로 상정하는 데에 여야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마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6. 高等敎育法中改正法律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이주호·권철현·맹형규·박세일·박순자·박재완·박찬숙·박창달·안상수·안택수·엄호성·원희룡·유기준·윤건영·이근식·이윤성·이해봉·이혜훈·정문헌·최구식 의원 발의)(계속)

7.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 高等敎育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병문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지병문 제256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금일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에 관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과 같이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다양한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에서 유형화하여 각각 정지 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부정행위를 유형화하여 정지 기간을 달리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부정행위와 중대한 부정행위를 구분하여 정지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과정에서 온정적인 법률 집행의 우려가 있어 응시자격 정지 기간은 모든 부정행위에 대하여 1년으로 통일하되, 교육적 차원의 선도 기능으로써 인성교육 이수제도를 마련하자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에 추가하여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동일하게 정지하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가 그 정지 기간 종료 후 다음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8항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규택 의원이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위

원회와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아직 계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4. 2006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11시50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장관님,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유아교육과 관련된 것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었는데 사실 법만 제정되고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 좀 미비해서, 양당 간사 간에는 일단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국·공립과 사립에 균형 있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학급 담당 수당 수준인 11만 원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봉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런 정도 수준이라도 지원을 해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치원 관련해서 두 번째는, 공립과 사립 공히 종일반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종일반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지금 62.5%로 되어 있는 것을 2010년까지 100%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독려책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셋째는 유치원 관련해 가지고 공립 병설 유치원 증설, 단설 유치원 설립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

병설 유치원 신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단설 유치원의 확대 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특히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 등으로 볼 때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된 공립유치원을 만들어 나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 운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는 지방대학 교육력 강화를 위한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가 두어 차례 질의했고 확인감사 때도 다시 한번 확인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누리사업이 지원되는 것은 좋고 누리사업의 성과에 대한 기준을 모델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누리사업도 사실상 R&D 쪽이고 BK21사업도 사실 비공개 R&D 쪽이기 때문에 학부 교육을 제대로 하는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확인감사에서 질의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군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누리사업 관련해서 250억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문위원께서 이것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누리사업 쪽으로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이 250억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학부 교육을 제대로 하는 대학을 위한 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질의가 누리사업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학부 교육을 제대로 하는 대학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시겠느냐, 아니면 누리사업과 별도로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학부 교육 제대로 하는 대학을 위해 예산을 마련해서 하시겠느냐, 방법은 어느 쪽이라도 좋다고 했는데 그때 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누리사업 예산 중의 일부를 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쪽의 견해를 펴셨어요.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 기억으로는 답변드릴 때, 본래 누리사업 자체가 설계될 때 학부 중심의 지방대학의 교육 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영된 것이니까 본래 목적대로 누리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부 누리사업 중에서 대형 사업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되어서 지역의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이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이 질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학부 교육을 제대로 하는 대학에 대한 사업비를 마련해서 심사를 해서 그런 대학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 지원의 근거를 누리사업에서 줄여서 하시든지 이 250억을 가지고 하시든지 새로 신규 사업을 마련하시든지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지 학부 교육을 충실히 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비 대책을 이번 예산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는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누리사업 금년도의 2400억도 대부분 지방대학 학부의 교육 역량을 늘리는 쪽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이군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 외에 또 다른 분야에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NURI사업도 보면 2007년이든가 2008년까지 총액 1조 4000억인가를 투자하잖아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군현 위원 그것이 결국 지역의…… 말 그대로 NURI라는 게 뭡니까? 뉴 유니버시티 포 리저널 이노베이션(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이던가? 지역의 특성화사업을 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대학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결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기자재 사고 말아 버리지 말고 교수의 체질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자재의 질을 개선해서 그 지역의 특화된 사업을 정말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이 돈이 끝났을 때, 이 지원이 끝났을 때 그런 역량을,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 사업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NURI라고 하는 것은 학부지만 결국 R&D 쪽의 사업이다, 그것은 좋은데 그것 외에 실제로 NURI사업과 BK21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대학 중에서 학부교육을 상당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 대학들이 받을 수 있는 사업 명이 없다는 문제가 제가 볼 때 드러났어요.

그래서 학부교육을 충실히 하는 대학을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셔서 응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편성해서 그런 사업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국감 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NURI사업 자체를 지방대학의 학부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적하시는 문제들에 좀 부족한 게 있다면 그런 쪽이 더 강화되도록 특별하게 몇백 억을 따로 만들어서 사업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NURI사업 전체가 그런 성격으로 가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군현 위원 아니, NURI사업 전체가 그렇게 가도록 하라는 것과는 조금 틀리고 NURI사업은 지금 방향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중의 100억이든 200억이든 일부를 지역의 특성화사업을 선도해 나가는 것과 조금 다르게 학부교육을……

예를 들어서 미국의 다트머스 칼리지라든지 스미스 워먼스 칼리지라든지 대학원이 없지만 학부만 갖고도 상당히 잘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카테고리를 갖고는 지방대학에서 그런 사업비를 받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NURI사업 중의 100억이든 200억이든 떼어서 그런 사업을 전개해서 잘하는 대학들을 지원해 주는 가지를 하나 치라는 것입니다.

말에 조금 오해가…… 차관님이 뜻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알겠습니다. 제가 이군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뜻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 쪽은 한번 연구를 해서……

○이군현 위원 금년 예산에 좀 짰으면 해서, 내년에……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산안심

사소위 때나 이럴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충분히 대화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된 것같이도 느껴지는데……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대학생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고 매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원도에서 연찬회를 하면서 횡성고등학교에 들렀어요. 거기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곳이 대도시도 아니다 보니까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처럼 좋은 사설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으로 분류된 학교에 결국 좋은 선생님들이 와 줘야 되는데 사실상 선생님들이 기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어떤……

제대로 된 학원이 없으니까 좋은 교사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어촌지역의 실질적인 바람입니다. 좋은 교사들이 농어촌지역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하니까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자녀 대학 학비 지원을 첫해에 1%를 하든지 5%를 하든지 우선 시작의 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장관님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농어촌에 처음 실시되면 전체 교원의 자녀로 확대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문제는 관계부처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에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이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전체 교원으로 하는 것은, 경찰공무원, 군인공무원들도 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자기네들도 대학생 학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교육부에서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들을 여러 가지 세우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평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가원 운영에 49억, 설립준비위원회 운영에 2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51억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평가원 운영에 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립준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2억 5000만 원을 우선 편성해서 준비를 하고 법이 통과되면 평가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는다는 것이 예산법정주의라고 할까요, 거기에 조금 맞지 않아서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관련 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회기 내에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안과 함께 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제출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국감을 통해서 시·도, 교육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각 학교에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 교육부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난번에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도는 저희가 특별교부금 32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시·도에 지원계획을 통보해서 차단 시스템 도입을 지금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다음에 영재교육 강화와 관련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래서 5000만 원을 평가사업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이 평가는 무슨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학교정책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간단히만, 시간이 다……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영재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이군현 위원 부산 내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아, 여기에 교육원 있지요? 그것까지?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예.

○이군현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결과처리를 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부분, 또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해 가지고 질을 좀더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안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이군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3억의 영재교육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운영비에 다 쓰고……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실질적인 영재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은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작년 결산보고서에 보면 사실상 3억 5000만 원 중의 3억이 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지적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주로 연구라든가 자료 개발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0억 가까운 영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군현 위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시간이 돼서……

실장님, 그것은 지방 시·도교육청에 있는 예산을 교육개발원이 용역을 따서 다시 가져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영재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선발도구 개발이라든지를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용역을 얻어 가지고 간접적으로 다시 연구비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중앙 차원에서 실제로 영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억 주는 것은 운영비에 거의 다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중앙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한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개발원에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를, 용역을 주면 주었지 영재교육센터 운영비 자체를 교육부에서 별도 항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KEDI에 3억 5000만 원인가 얼마……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예, 프로그램 평가 비용을…… 용역을 줘서 의뢰한 것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지요.

○이군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재교육본부라는 것을 KEDI에 설치해 놓고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까? 그러면 그 본부를 설치해 가지고…… 영재교육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다는 얘기는 3억,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저는 중앙정부에서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개발원 자체의 전체 예산 속에서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이군현 위원 개발원에서 전체 예산 중 3억 정도를 편성한 것입니까? 교육부 예산 중에서 그게 꼬리로 내려간 게 아니고요?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장 윤웅섭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하여튼 그게 너무 미미하다고 하는 것이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저희한테 주세요.

시간이 가서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시간이 주어지면 하고, 만약에 안 주어지면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우 위원 나라 살림 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은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저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국회예산정책처하고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해 놓으신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 준비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교육부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놓으신 것과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해 놓으신 내용들에 대한 답들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 계시지요? 실장님, 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러면 제가 죽 비교해 보면서

국회의 검토의견들, 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부총리님이 가 버리셔 가지고 좀 그런데, 부총리님께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장도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 가셨는데 유네스코에서는 국제사이버대학을 우리 한국에 설립하고 싶어 한다는 의견들을 아마 부총리님과 교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비용도 일부나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유네스코 국제사이버대학 설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의지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육부 예산으로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교육부가 지금 산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관님께서는 내용을 잘……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제 기억으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교육부 예산에 직접 해 놓거나, 아니면 관련 대학에 설치하는 방안, 이런 부분을 검토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어쨌든 대한민국이 e-러닝 선도국가라고 하는 특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또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적 기구가 저희 대학에 설립을 하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e-러닝 선도국가로서의 특징을 분명하게 살려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백원우 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접촉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졌던 이야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집이나 그렇지만 특수 아동, 그러니까 신체장애 아동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체장애 아동들은 신체에 불편함들은 있지만 의식이 똑바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대부분 정신지체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학부모들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 학부모들에게는 아주 절실한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보조원들을 작년에도 많이 증원을 했고, 또 내년에도 증원하기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 중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그러니까 방과 후에 특수학급들을 운영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치되는 교사들과 수업 중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보조원들은 질이 다르거든요. 차관님이 그 내용 아실까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백원우 위원 그러니까 수업 중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보조원들은 단순한 행동의 보조 정도만 해 주게 되는 것이지만 방과 후에는 일종의 치료교사적 의미의 특수교육 보조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렇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약간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수교육 보조원 채용지원사업에 그냥 뭉뚱그려져서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기획예산처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무조건 삭감을 해 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보기에도 참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님들의 절실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만 몇 시간만이라도 더 아이들을 케어해 준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을 두고 있는 가정들의 대다수가 저소득층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예결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좀더 반영 요구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20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특수학교에 가 보면 우선 특수학교 교사들은 정말 특별한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정부가 도우미 형태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케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 이군현 간사와 사회교대)

○백원우 위원 저는 학부모님들의 절실한 요구를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다 안심하고 맡겨 놓고 일들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어야 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사설 치료기관에 가면 치료 교육비가 대단히 비싸거든요. 그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술 치료나 작업 치료 같은 것들은 시간당 몇만 원씩 하는 고액의 비용들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증설해 주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제 제가 당정협의 시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장향숙 의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신체장애는 이미 장애로 보지 않는다. 이미 신체장애는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무장애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또 신체장애인들이 이후에 먹고사는 문제까지도 국가가 모두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체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 정신지체를 중심으로 하는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이 장애인들이다. 이것을 이제 국가가 케어해 줘야 된다. 선진국은 이미 그렇게 가 있다. 우리도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점들이 이런 쪽에 많이 찍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우리 당의 장향숙 의원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군현 위원님 얘기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단설 유치원이 증설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아교육에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들을 하고 계신데, 단설 유치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단설 유치원을 설치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저는 단설 유치원이 증설되는 그 시설비만큼을 병설 유치원의 지원비나 병설 유치원 증원에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기본적으로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다만 단설 유치원을 확대한다는 그 뜻은 무조건 단설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의 뜻보다는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시설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병설로 가야 되고, 꼭 단설 유치원이 설치되어야 되는 경우는 해야 되고 그런데……

○백원우 위원 단설 유치원의 기본적인 시설비, 건축비 같은 게 한 개당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혹시 국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대략 한 60~70억씩 들어갑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11억……

○백원우 위원 그것은 국고에서 11억 지원한다는 뜻이고, 전체 건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유아교육지원과장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 박영숙인데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5학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지는 시·도교육청에서……

○백원우 위원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 하나가 들어가는 데 지방재정 다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대략 생각하시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유아교육지원과장 박영숙 저희들이 건축비만 11억 정도……

○백원우 위원 건축비만 11억 보조하시는 것이고, 부지비 포함해서 다 하시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교육재정 다 포함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학교정책실지방교육지원국유아교육지원과장 박영숙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국고 부분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어쨌든 시설비, 하드웨어에 투자되는 비용의 규모가 단설 유치원은 너무 큽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지금은 시설비에다 투자하기보다는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영비 지원들…… 지금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시설비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단설 유치원을 증설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고, 그

것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병설 유치원을 좀더 증원해 주시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단설 유치원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좀 방향을…… 차관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지역 실정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학생들의 신규 수요가 그쪽으로 도는 경우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상황을 잘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아무래도 장관님이 빠지시니까 좀 김이 빠지네요. 장관님한테 여쭤 보고 싶었던 것인데……

부총리님께서 세제실장, 경제부총리를 하셔서 아무래도 경제에 밝으신 분이라서, 교육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좀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세제개편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지금 유아교육재정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세원들을 발굴해서 세목을 신설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감세 논쟁과 함께 일종의 국가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라고 요구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10조에 이르는 돈을 감세해야 된다고 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들을 여쭙고 싶었는데,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내년이면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과연 교육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고 우리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역마다 교육의 특성들이 있고 또 지방교육에 특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들을 하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는데요.

내년 3월 신학기 개학할 때쯤 되면 중앙정부에서 약간의 예산들을 지원하셔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교육 현안과 교육 전망들, 그다음에 과거 교육과의 비교, 그래서 현재의 교육이 얼마만큼 변화되어 왔는가, 또 우리 지역 교육, 경기도 교육의 변화의 상은 어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집들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보통 신학기에 학부모들이 다 모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 교육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교육개혁의 성과들 그리고 교육개혁의 비전들을 홍보하는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기보다 경상경비에서 충분히 지원가능하고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지원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홍보대책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차관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저희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시·도교육청들이 매년 해가 바뀌면 전년도나 그간에 펴온 시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원우 위원 그런데 그 자료들이란 것이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주얼하게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계신 공무원님들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는 관료들께서 직접 학교에 나가셔서라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좀 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재정이 우리 국가재정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세원들을 늘리고 증설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더 세원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책임지고 국민들을 설득해 주어야 됩니다.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을 교육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국민 접촉면을 아주 넓게 가지고 있는 부서가 유일하게 교육부 아닙니까? 전국의 수백 만 학부모들을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게을리 하는 것 아닌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는 성과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강화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의 내용을 백서 형식으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백서 형태의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을 정도의 형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나 전문가들에게 설명하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아니라 당장 우리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가 된다든지, 우리 지역의 학교설립계획이 어떻게 된다든지, 우리 지역의 중등교육의 질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고 홍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교육청 단위나 도교육청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성에 안 찹니다. 참여정부가 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육을 더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왜 교육부가…… 제가 보기에는 성에 차지 않아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별도의 항목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경상경비나 특교 중에서 일정한 부분들을 종자돈으로 투입하셔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군현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저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 성공의 열림길이고 완성길이라고 봅니다. 교육에서의 첫 출발은 유아교육이 되겠지요. 물론 그 전에 태아 때부터 태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바깥의 영향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번에 교육부의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유아교육지원계획에 발전적인 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환영합니다.

제가 과거에 사립유치원에 장학지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참으로 가슴 아픈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해서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수당을 반영해서 계상한 것을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차츰차츰 발전적인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종일반 선생님들의 수당도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아침 7시, 8시에…… 제가 기관에 있을 때 병설유치원과 학교를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봤습니다.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저녁 8시까지 합니다. '한 교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제가 옆에서 있어주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교사를 존중하면서 또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편안하게 보살펴줄 수 있는 종일반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부 대책이 세워진 것을 환영합니다. 차츰 더 발전적이기를 바랍니다.

고등교육평가원 운영예산으로 49억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법률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겁니다. 법률안은 나중에 제출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안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제가 2004년 11월에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개선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200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지적을 했고 교육위원회위원장께서 정부 측에 유감의 서한도 보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물론 찬반 여부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 예산권이라든지 법안심의권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국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라든지 법률안 심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최소한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예산이 꼭 필요한 곳, 우선순위가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안을 만드느라고 상당히 애들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e-러닝 세계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0억 72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6년 국내 e-러닝인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6억 800만 원을 계상하고 e-러닝 세계화사업은 2.5배에 달하는 40억 7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내 e-러닝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세계화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위한 e-러닝보다…… 교실에 집중해서 개선해야 할 설비가 많습니다. 학교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체면만 중요시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계상된 e-러닝 세계화사업비 40억 7200만 원은…… 아직은 국내 것을 우선하고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고등교육평가원법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은 예산안과 관련되는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러닝 세계화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e-러닝 부분이 굉장히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예산지원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앞서가는 e-러닝을 세계 속에 알림으로써 국가의 위상도 높이고 특히……

○김영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리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국내 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정착화되어야지 학교에 파급효과도 10%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더 많은 곳에 홍보가 되고 더 많이 활용되어서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화에 40억, 국내에는 16억인가 그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행정혁신 운영지원사업에 1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혁신 운영지원사업을 별도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교육부 본부에 한 조에 167만 원짜리의 책상·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4억 84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반면에 국사편찬위원회는 단가가 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PC 교체예산 5억 원 이렇게 해서 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한 조에 170만 원이나 하는 교육부 본부 직원들의 책상·의자 교체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국감 때 교육부에서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고 하면서 유치원과 초·중 이때에 기반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지적했듯이 30년 이상된 학교의 136만……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안 했습니다. 136만 5000여 조의 책걸상 교체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한 조에 10만 원짜리로 계산해 보니까 13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시·도교육감님들은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필요하지만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잘 되면 거기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책걸상 교체의 대상이 전국의 유·초·중 학생들이거든요. 아이들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척추측만증에 걸린 아이들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들의 책상을…… 건강에서 척추가 가장 중요하니까 책걸상 교체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교육부에서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체 예산이 1360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한테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길게 하시면 곤란하고요, 지방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고 미루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군현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기본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항상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본부 운영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대개 국고예산에 편성된 것 중심이고 지방재정은 19.4%가 법정교부금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19.8%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결국 시·도교육청이 어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저도 방법적인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교육감도 책·걸상보다 더 우선해야 될 사업이 많다, 초·중등교육비가 상당히 많다고 해도 경직성 경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고등교육기관, 대학의 예산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통교육의 예산이 적은 것이에요. 봉급하고 경직성 경비 제외하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걸상 교체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2단계 BK21사업도 2006년에서 2012년까지 7년에 걸쳐서 매년 3000억 원씩 2조 1000억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 평가라든지 2단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없이 2006년도 예산 3000억 원이 과연…… 가장 기본적인 교실 설비도 계상 못 하면서 BK21사업은 나눠먹기식이라는 평가도 있고 부작용도 있는데 여기에 3000억이라니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중에서 1360억 뚝 떼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라도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3000억 원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당한 평가가 나온 다음에 정말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실 안부터 개선을 해 주어야 됩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1단계 BK21사업 부분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저희들한테 좀더 잘 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요.

1단계 사업 평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가해 왔고요, 특히 해외에 있는 석학교수들 중심으로 해외자문단을 편성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평가가 나쁘다는 것도 있지만요, 나누어먹기식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 말은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12년까지 매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년 된 학교의 아이들 책걸상을 바꿔 주시오 하는 것을 안 하고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책을 교육부에서 세워야 되는데 지방 교육감한테 미루고 있고 교육감은 돈의 우선순위, 경직성 경비, 인건비 빼면 별로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구한 대책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 주십시오. 국감 때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졌습니다.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대학교의 교사교육센터가 있는데 건립비가 2005년에 비해서 90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수립 당시 12개 교육대학의 교사센터 모두 2005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2007년으로 완공 시기를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이것을 짓다가 완공이 덜 되고 추진하다가 마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서울교육대학의 경우입니다.

건물이 2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진단되어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그런데 총액배정제 예산 방식에서 다른 예산에 밀려서 지금 예비교사 양성기관 교사센터도 밀려 있습니다. 기본 여건인 강의실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2세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강의실난 해소를 위해서도 90억 5000만 원 감액된 것을 증액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우선 교육대학의 교사교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단기간 내에 완성해야 됩니다. 전체 예산 규모의 실링 때문에, 예산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하다 보면 결국 그 사업을 완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완공 위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여러 국립학교, 국립대학의 사업이 필요한데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충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에서 어느 것을 먼저 질의할까 하다가 결국 다 중요하다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 못 하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시설 여기에서도 BTL사업을 보면 국립대학은 통폐합,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기숙사 신축 BTL 예산은 서두르고 있어요. 물론 기숙사도 나중에 다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초·중등학교의 경우에 실제 보면, 엊그제도 개교한 학교를 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요.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실내체육관은 지었습디다. 마당 부지가 있어도 체육관이라든가 설립이 안 된 곳이 있고 운동장

도 불편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도 보수해야 될 것, 리모델링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책걸상 문제라든가 교실 안의 시설이라든가, 저는 BTL 우선순위가 초·중등교육에 우선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초·중등교육 부문은 당초 3조 300억 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랬는데 1조 6000억 원으로 감축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없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당초 초·중·고에 BTL사업을 시작할 때 각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아주 엄밀하게 심사해서, 앞으로 길게 봤을 때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업인지를 엄밀히 심사해서 당초 계획대로 했고요.

그래서 1차 연도는 계획 물량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2차 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 물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체는 알지요. 그렇지만 저는 초·중등에 BTL사업을 우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전체 중에서 초·중·고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직속 기관의 불용액이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자꾸 나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것은 왜 불용이 되었는가를 따져 보겠습니다만, 물론 예산 편성과 결산이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면 좋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잔액이 남아서 된 것이 아닌가, 구체적인 내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선 달라고 손 벌리는 데, 필요한 데에 좀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다시 잘 책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정회하기로 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국립대학 시설비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고민을 좀 해 봤으면 하는데요.

지금 국립대학이 전국적으로 많은 시설을 착공해 놓고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시설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5년, 6년 이렇게 지나야 완공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현재 전국 국립대학의 잔사업비, 시설 착공을 해 가지고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앞으로 더 지출해야 되는 사업비의 규모가 전체 얼마쯤 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한 7000억 규모 됩니다.

○지병문 위원 결국은 이 7000억이 들어가야 완공될 수 있는, 다행히 이런 어려움을 교육부가 인식을 해서 지금 2006년 예산에는 신규사업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의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이 오랫동안 완공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정부 예산도 물가 상승으로 증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시설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4년이든 5년이든 정부가 결국 그 공사비는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통과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액수를 몇 년에 걸치든, 4년이든 5년에 걸쳐서 어차피 지급을 하니까 정부가 일단 시설비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국립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 주고 국립대학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단시일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는……

정부는 한꺼번에 이 예산을 전부 투입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4년이나 5년 이내에는 다 지급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사이에 물가 상승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급보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7000억 정도의 잔사업비가 있다면 이것을 좀 빨리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

는 건설 경기도 살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법적으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기본적으로 국립대학 시설에 대한 잔여 공사비 문제 때문에 학교 공사가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과 똑같이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고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면 신규 사업을 벌이지 않고 완공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BTL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결국은 국립대학에 대해서 기채행위를 하는 문제인데 그런 기채행위는 결국 국가 채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병문 위원 국회 의결도 의결이지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BTL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작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이고, 이미 70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사업이 여러 대학에 분산되어서 진행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채도 기채지만 이것은 결국은 정부가 어떤 사업을 특정 대학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국회에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그 예산은 다 지불하는 거니까 지급보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가 적체되어 왔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보증을 해 주고 대학이 그것을 빌려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 정부는 4년이든 5년에 걸쳐서 그것을 다 지급하면 되니까…… 그 문제를 법적으로 법률을 어떻게 바꾸어서 해결할 것인가는 법조문을 저희도 보겠습니다마는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문제 인식에는 동의하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관계 부처와 좀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병문 위원 2006년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대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서 교육정책으로 보면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중의 하나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교육 격차 해소, 교육복지 확대,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요즘 교육부가 크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격차 해소나 교육복지 실현이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확실한 정책적 의지가 2006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해야 된다,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되지만 특히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서 특징적으로 과거의 예산과 차별화되어 보이는 게 없다는 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부하고 위원회가 더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좀 분명하게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

육아지원 예산만 하더라도 지금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으로 나뉘어 있는 육아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일원화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하고 여성부로 나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잘 안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2007년부터 3세부터 5세에 대해서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3세부터 5세가 보육시설뿐만 아니고 유치원에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바거든요.

문제는 기본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교육의 질이나 시설 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런 평가 없이 기본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교육부도 그것은 같이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보조금이 지급되면 사실은 보육시설이든 유치원이든 종일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 지적하셨지만 농어촌의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고등교육평가원을 법을 만들어서 설립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분명히 오랫동안 숙제로 되어 있었던 문제……

사실은 유아교육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보고한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3억 2000만 원 정도로 최소한으로 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의지가 있으면 다른 부분들을 삭감하고 이것을 올릴 수 있는데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대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정책에 맞느냐, 그 뭔가는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할 얘기 있을 텐데, 짧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정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 예산 투입도 필요하고 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유아교육 이런 분야에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산을 정부 국고에서 얼마나 반영하는가, 또 지방비에서 얼마나 반영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병문 위원 또 하나 총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 제고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할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지적했어요.

1단계 BK21에 대한 부분 또 누리사업이 실시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정된 재원을 제대로 배분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있게 쓰여야지 효율성 없게 쓰이면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다……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대책이랄지 교육 격차 해소, 교육 복지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억, 200억이 편성되면 이것은 가시적으로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BK21은 지난 7년 동안 2000억씩 1조 4000억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근거로 갑자기 3000억이 툭 던져지고, 누리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갑자기 몇 백 억이 늘어나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교육격차 해소나 교육복지 확대, 저출산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책을 세우는 데는 그렇게 가시적인 노력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BK21·누리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동의와 이해 속에서 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것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비효율적이고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면 효율성이나 우리 국가정책이나 국가 미래를 위해 볼 때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100억, 200억만 배정을 해도 효과가 보이는데 그것은 인색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자꾸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지적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당분간 소위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예산관계 논의가 될 테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와 평가를 우리한테 제공을 하고 또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줄이고 이것은 해야 되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제 질의는 서면질의로 하든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 다른 부처에서도 지금 속속 예산에 있어서 성과목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육예산에 있어서만큼은 성과목표체계가 지금 전혀 구축이 안 되고 있는데 차관, 왜 안 되는지 한번 이유를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교육정책에서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는 게 다른 사업보다도 성과측정이 어려운 내재적인 한계도 물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 봤습니까? 지금 교육인적자원부 이

름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예산 성과목표체계 개발연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교육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는 안 쓰여지고 불필요한 데에서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체계를 빨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보고 같은 데에서 이 성과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예산부분에서 성과목표체계를 언제부터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는데 언제부터 하시겠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목표체계라고 하는 그 뜻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주호 위원 각 부문에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에 따라 가지고 예산안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 모르십니까, 차관님?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런 부분들은 각 사업을 통해서 죽 해 왔습니다.

○이주호 위원 해 왔다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이주호 위원 교육부의 문제가 모든 것을 문제를 지적하면 해 왔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보면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로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 비해 가지고 교육부가 성과목표체계를 구축하는 데 뒤처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만큼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해 왔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아니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면 미흡하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그 수정을 빨리 하셔야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저희들이 각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내부평가와 또 외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위원 나름대로는 노력한다는 대답은……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하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부족한 부분은 항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 지금 시인하셨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셔야지요, 맞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주호 위원 두 번째 지적하겠습니다.

결국 각 분야의 성과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예산체계를 가지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교육예산에서도 이제 달성해야 되지만 당장 각 분야, 분야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학업성취도 평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학업성취도의 표집이 3%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3학년의 경우까지도 확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학력진단을 해야지만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고 학력도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보니까 지금 이런 사업의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현재는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비율을 3%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표집의 범위를 규모나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정책연구도 해 나가면서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이것도 계속 그냥 의견 수렴, 연구만 하실 것입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원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APEC 수업 같은 문제가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사들이 학부모나 또 지역사회나 이런 쪽에 책무성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반APEC 수업에 있어서 교사들이 이런 것을 하더라도 교장이 전혀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교장들에 대한 책무성 강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지금 교원평가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폭 늘려서, 특히 교원평가의 기준 같은 것을 설정하려면 상당히 많이 연구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오히려 예산 편성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그런데 반면에 대학평가에 있어 가지고는 실제로 대학부분은 자율로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가재정으로 지원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율적으로 질 관리가 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예산안을 보니까 고등교육평가원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고등교육평가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부문에서 대교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가 있는데 이것을 국가가 독점하게 되면 오히려 평가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가 관료화되고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법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안 됐는데 이게 버젓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왜 국회에서 지금 동의도 받지 않은 고등교육평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대답해 보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관련예산 부수법안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교육부가 기구 늘리는 예산 편성만 우선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금 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등교육과 관련해서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에 보면 입학사정관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

○이주호 위원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2008년 대입제도 개선안에 넣어 놓은 것은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이주호 위원 그런데 거기 예산이 지금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입사정관제도를 시행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주호 위원 특히 사립대학에 지원하려면 재정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2005년, 2006년 예산안에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국민한테는 약속을 해 놓고 왜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입학사정관제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발표할 때 사립대학의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입학사정관제도를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 자율적으로 대학의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또 국립대학의 경우는 저희들이 국립대학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주호 위원 그러면 입시사정관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이네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예산은 편성 안 해 놓고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예산이 별도로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성격이 됩니다.

○이주호 위원 지금 예산이 큰 문제가 아니니까 하시겠다는 얘기이지요? 이것 제가 계속 체크해 볼 테니까 약속하신 대로 꼭 잘하세요.

다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의 정책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정책홍보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교육부의 홍보예산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홍보분야가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자치가 강화될수록 계속

중요해집니다. 교원평가제도 도입할 때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되고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자원봉사 활성화 또 지금 사학의 투명성 제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에서 학운위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운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부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 뉴질랜드 같은 데에는 대대적인 TV 캠페인을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지역의 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최근 교육부가 지나치게 교직단체 눈치만 보고 막상 학부모들의 참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운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의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정책홍보예산 속에 홍보의 항목은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학운위 쪽 정책홍보가 부족하니까 홍보예산을 더 편성하는 게 어떠냐고 제가 질의하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고요. 반면에 지금 홍보예산을 보면 대학지원사업에 주로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BK21사업이라든지 고등교육평가 지원이라든지 대학특성화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는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돈을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많은 홍보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저는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에 홍보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대학이 정말 납득을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재정 지원 하니까 그래서 역으로 홍보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지원사업이면, 재정지원사업이면 별도로 이렇게 홍보예산까지 많이 책정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대폭 줄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 학교정책의 활성화에 홍보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등교육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하면 BK21사업에 대한 문제의 인식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이랑 정말 공감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BK21사업은 정말 많은 문제가 지적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2단계를 할 때는 제대로 된 평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특별양성과정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교육 부분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학협력사업도 있고 누리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특별양성과정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사업을 많이 벌이면 대학 현장에서는 오히려 지원해야 될 사업만 더 많아지고 지원서를 써야 될 숫자만 더 많아지고 또 설령 이게 지원으로 확정되더라도 여러 가지 복잡한 운영체계에 따라서 복잡해지고 행정적인 비효율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지원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좀 단순화하고 통합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사업을 신설할 때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예산소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됐으면 합니다.

○이주호 위원 저희가 그것은 예산소위에서 심도 있게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혁신운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업의 본래 목적과 실제 지출내역을 보면 다수 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지출이 시설 설비와 전산장비 교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는 좀, 아예 본래 목적을 분명히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교육행정혁신사업

은 저희들이 행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은데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 전북 익산을 국회의원 조배숙입니다.

우선 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재정규모 비율을 보니까 2002년도 4.21%에서 2006년도 5.23%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늘었나 내용을 보니까 BTL사업, 이것을 여기다가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확충의 시급성 때문에……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자금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교육예산에 포함시켜서 교육재정의 총량이 확대된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GDP 대비해서 교육재정은 늘어났지만 일반회계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정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145조 7191억 원인데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8%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4%였는데 오히려 비율은 0.6%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정부예산 증가분에 대한 자연 증가이고 어떻게 보면 교육재정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교육부의 예산 확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 대비 0.6%가 축소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정부예산 국채규모 대비해서, 국채규모가 3조 3000억이나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채규모 증가액 3조 3000억 원을 내국세 규모 증가로 환산시키면 교부금이 6400억 증가된 효과가 되기 때문에……

○조배숙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금년 같은 경우는 경기가 부진해서 세수 결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것은 지방교육재정 관련해서 제가 질의할 것에 대해 미리 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GDP 대비 교육재정은 늘어났는데 일반회계에서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이 전년 대비 0.6%가 줄었들었다……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 확보 노력을 덜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쭤 봤는데……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 28조이고 내년 예산이 한 30조에 육박합니다만 대개는 예산 증가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인건비 증가율을 못 따라가지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만 충분히 원하는 만큼 실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증가율이 얼마인지 그것도 제가 더 따져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지금 답변을 미리 하셨는데요, 지방교육재정이 좀 심각한 것 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조배숙 위원 대개 그 재정의 70%를 국가가 부담해야 되고 또 세수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수 결함이 생겨 가지고 이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서 지방은 또 경직성 경비가 73.5%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빚을 지더라도 일단 경직성 경비는 안 나가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세수 결함으로 교부금이 결손되면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할 데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계획된 교육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처해서 안정적 운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도 지방채가 1조가량 발행될 것으로 추정되어 있고, 지금 2005년도에는 2조 9991억 원 지방교육채 발행 예산을 편성했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리고 2006년에 1조가량 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지방재정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요, 그다음 세수 결함으로 세입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세입 자체에서 보면 금년도 시한이 종료되는 교육세를 연장한다든지, 또 지금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학교용지를 싸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효과가 있는 문제라든지, 그다음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지 않더라도 예산 증대효과가 있는 부분 쪽에 역점을 두고, 한편으로는 지금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주 극소한 과소규모 학교는 통폐합해서 때로는 예산 절감도 기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요, 지금 지자체 법정전입금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사실은 교육부 고민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돈 쓸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방교육재정의 경우에 지자체에서 법정전입금을 많이 투여해 주면 인센티브를 줘서, 성과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장려하는 식으로 하면 지자체에서 좀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일반 지자체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요소에 담아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관련인데요.

지금 WTO체제 출범하면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조배숙 위원 이것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지역 어려움을 지원하고 복지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회계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거기에 관한 예산을 지금 한 432억 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 10월 24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아까 얘기하신 과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 그런데 이것이 농어촌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등학교는 200명 이하를 통폐합하고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서 차등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따져보니까 1452개교가 통폐합되고, 또 전라북도 지역과 같은 농도는 상당히 많이 문을 닫습니다. 초중고 가운데 약 170개, 그다음 농어촌학교 471개 가운데는 14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 텐데,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농촌교육을 희생한다는 것은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학생들 교육권이 침해받는 것이 되고, 그다음 농촌 교육환경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또 일면에서는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복식수업 교재 프로그램 개발, 교원 복식수업, 순회교사 수당 신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줄인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농어촌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쓰고 있고, 그러면 이것이 뭔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농어촌특별회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2525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폐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몽땅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읍·면에 1개교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런 경우 한 1500개교가 남아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복식수업이라든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배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소 학교 통폐합 문제는 결국 농어촌지역이 해당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또 제가 농촌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통폐합하는 것만이 꼭 좋은, 이미 또 통폐합해서 폐교도 많이 있고 그런데 더 계속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과학의 발전 없이는 미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한창 커 나가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와 학교시설만으로는 과학적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데가 과학교육원입니다. 저는 과학교육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살펴보니까 아주 구태의연하게 전시되어 있고, 상당히 낙후돼 있고, 또 사이버세대에게 흥미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교육연구원, 정보교육원, 과학교육원, 이렇게 한꺼번에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을 보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경기도·부산·경북·서울 과학교육원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또 광주 충북 인천 경남 대전은 지금 통합운영하고는 있지만 건물은 따로 따로 신축 운영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북도에서는 도교육청,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합심해서 과학교육원 신설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제공하겠고 재원도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과학기술부도 또 과학관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알아보니까 BTL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BTL사업으로 과학교육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교육원도 BTL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잘 따져보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BK21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2004년도 BK21사업에 참여한 여성 인력이 교수 96명, 포스트닥터 139명, 계약교수 70명, 석사 1070명, 그다음 박사 58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석·박사 학생의 경우에 과학기술분야 참여 학생이 20~30%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상당히 유능한 여성인력이 많은 데도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어떤 지표를 만들 때 성평등효과를 고려해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BK21사업을 보니까 이런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 구상이 전혀 없습니다.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정부 대형 국책사업의 여성과학자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기로 12월부터 강제규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BK21사업은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 예산의 지출이 남녀의 차이나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되고 집행되고, 또 여성도 예산의 집행효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적인 예산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도 과기부하고 마찬가지로 여성연구인력 확충 정도에 따라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기부 사례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배숙 위원님이 교육재정의 전

반적인 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한번 짚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는 2006년도 교육재정이 총 45조 8000억으로 GDP 대비 5.2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에 따르면 사실 2000년도 이후 계속해서 4%에 머무르던 것이 2005년도에 BTL 등의 추진으로 2006년도 예산이 5.23%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OECD 어느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평균 6% 수준에 달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허구인가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BTL사업은 빚 아닙니까? 빚을 내서 확충하고 GDP 대비 6%로 올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표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보이며)

여기를 보았을 때 이 선이 일반적인 교육예산입니다. 2001년도하고 2006년도 교육예산을 놓고 보았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기타하고 지방채하고 BTL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도표를 뒤집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내서 이렇게 교육예산을 올렸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오히려 2006년도가 2001년도보다 교육부에 관한 예산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차관님 이해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GDP 대비 교육재정이 4.98%이고 그것이 27조에서 28조가 되는 것이지요.

○최순영 위원 비율로 이 폭을 보았을 때 2005년도, 2006년도에 굉장히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의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요.

○최순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이 노란색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교육재정이.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육예산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2006년도 현재 예산은 42조 1693억 원으로 사실 GDP 대비 4.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대선공약에 의해서 GDP 대비 6%까지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끊임없이 교육예산을 4.8%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6%까지 확보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관계부처와 또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하여튼 교육부에서도 예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같은 생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교육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예산 어디에서 삭감해서 그쪽을 올려 주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BK21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7년간 2조 1000억이면 사실 엄청난 규모의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7년간 죽 진행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인데요.

아까 진수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면서 성과가 뭐냐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에는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와 돈을 많이 쓴 것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런 것들이 사실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우선 대학에 투자되는 예산의 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투자는 늘려 주어야 되고, 다만 대학에 투자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달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물론 저희들이 대학에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대학재정 지원은 늘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늘어나는 것과 재정의 낭비성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BK21사업이 굉장히 낭비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재정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뭐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든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BK21사업에 대해서는 초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사업의 성과를 저희들이 꼭 물량적으로 SCI 기준 하나만 가지고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은 7년 전에 시작될 때 대학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위한 인력양성사업으로는 최초의 사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꽤 많은 성과를 가져왔고요. 또 대학에 경쟁구조를 가져왔고요.

물론 SCI 논문 결과가 반드시 BK21사업 하나로만 된 것이냐?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물론 보완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죽 본 것은…… 성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논문증가율에 있어서도 저조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BK21사업 시행 이전인 1995년도에서 1998년도까지 3년 동안 전년 대비 논문증가율이 평균 22.6%입니다. 그다음에 시행 이후인 19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5년 동안 전년 대비 논문증가율은 1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 대비 2003년도 논문증가율은 사실 62.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SCI 논문 발표나 성과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이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보태도 되겠습니까?

○최순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BK21사업에 대해서 물론 수치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사업을 통해서 대학에 경쟁 시스템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대학에 경쟁력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사실 대학의 경쟁력을 놓고서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과학기술 분야, 인문사회 분야의 전체 46개 사업단 중 서울대 사업단이 13개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놓고 봤을 때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느냐,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40% 이상을 가져가고 다른 대학들이 그 나머지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대학들은 더 소외감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도 정확하게, 이 예산은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제안도 하는데, 연도별 총 지원액 중 한 대학이 1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 대학에서 3개 이상 사업단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상한선을 두어서 형평성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 보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BK21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연구 중심대학 사업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순영 위원 예, 물론……

그런데 우수한 학생이 꼭 서울대에만 있나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물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어차피 제한된 예산 때문에 결국 예산 배정을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최순영 위원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꼭 서울대에만 그렇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은 결과적인 얘기고, 서울대에 사전적으로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서울대가 올해 겨우 턱걸이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다른 대학에 더 지원을 했을 때 성과는 어땠을까, 이것도 사실 비교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교육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삭감해서 올해는 교육복지예산을 좀더 증가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부가가치산업 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처음 시작하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있습니다. 보면 단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해서 실제 산업인력 생산 효과가 생길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처음에 이 사업을 마련할 때 그냥 마련한 게 아니라 산업체를 방문하고 실제 산업체의 요구를 분석해서, 또 단기간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과연 2개월 동안 사업 준비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집행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을 이번에 100억으로 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면 오히려 집중적으로 하나를 실험 단계로 해 보면서 늘려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자금의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주택구입 대출 같은 경우에도 1억 5000만 원이 한도액이고 금리가 4.7%에서 5.2%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상환도 1~3년 거치, 17~19년 상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학자금을 7%로 받는다는 것은 이것과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주택구입자금 대출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택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택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학자금은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되어야 되고요.

그동안 국가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신용대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대출받고 난 다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정부가 이자차액 중 2.5%를 부담하면 2005년도, 2006년도 합해서 354억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3%를 부담해 준다면 425억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라고 물론 생각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을 놓고 봤을 때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데를 좀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도액도 4000~6000만 원이거든요. 그야말로 어려운 집안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을 수 있도록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시간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오늘 장관님이 안 계셔서 차관님이 대신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교육재정 기본골격과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절대기준이라 그럴까요, 교육예산 절대량과 관련해서 저는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교육 분야 그 자체에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의 절대증액과 관련하여 지금 이렇게 해마다 몇 %씩 증가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 목표치가 어디까지인지……

그러니까 GDP 6% 공약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섰는데 그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하고 교육재정 자체에서의 불건전성까지 다 포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장기적인 전략과 계획 속에서 GDP 6%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으실 때가 됐거든요.

원래 2월에 취임하시면서 4월에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시겠다고 그랬다가 6월로 미뤘다가 9월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이게 거의 막바지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교육정책을 꾸려가는데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설정하기 참 어려운 것이…… 물론 각 교육사업별로 우리가 원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확보하는 게 실현 가능하느냐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재정경제부와 앞으로 5년 내에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GDP 6%라는 형식적 접근이 아니라 중기재정규모를 설정하는 내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다시 산출을 해 보겠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산출되는 게 어느 정도 액수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오늘 보고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5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현재 약 28조 규모인데 이게 2009년까지 36조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일단 그 정도만 짚겠는데요.

교육 분야에서 고등교육,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 교육, 기타 교육 이 부분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혹은 비슷한 액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고등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돼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평생교육 부분들이 국가경쟁 전반의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되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말하자면 국민의정부 시절에 정보화 사회로 빨리 가자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선적으로 정보 인프라를 깔아 들어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깔아 들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투영되지 않은 이런 식의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중기재정계획은……

○이인영 위원 예컨대 평생교육이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교육안전망의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양극화, 양극화 하면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배제된 채 중기재정계획을 계속 이런 식으로 설정한다는 게……

그러면 과연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전환하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중기재정계획은 결국 앞으로 한 5년 내에 적어도 전체 소요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얼마이냐를 추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연동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야별로 변동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학적인 통

계의 추정에 의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회 속에서는 특별하게 이러이런 부분들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니까 교육재정에서 이만큼의 재정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요컨대 초기부터 실링 배분이 되는, 이런 때부터 그것의 확대를 요구해서……

예컨대 산업에 있어서 SOC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서 이동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재정계획을 잡아들어가는 게 오히려 중기재정계획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결국은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도……

○이인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해를 더 거듭해 가면서 평생교육이라든가 교육복지라든가 교육안전망이라든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들에 들어갈 비용들이 적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인영 위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분야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영되지 않은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교육부 자체에서 소요할 교육예산에 대한 것 말고 유관부처나 유관분야에서 동원 가능한 교육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간접적인 예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규모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컨대 과학기술부에서 R&D라든지 정보통신부의 그런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이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인영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볼 겁니다. 유관부처, 관련부처……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관련부처의 교육예산으로 포함된 예산, 그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영 위원 예.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은 저희들이 타 부처의 교육관련 또는 인적자원 개발……

○이인영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타 부처에 있는 예산 중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관련된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는 3조 8000~3조 9000 정도 됩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뭐에 대한 기준치인지 제가 정확하게 몇 %라고……

○이인영 위원 한 일점 몇 % 되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비교 기준이 GDP 기준 아니면 교육……

○이인영 위원 GDP로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0.5% 정도입니다.

○이인영 위원 세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액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맞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이 시·도 광역자치단체이건 아니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이건 간에 늘어나는 추세임은 맞는데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보니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균이 2%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최대한 3%까지 되고 순천 같은 곳은 이미 5%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3% 정도는 확보하는 노력을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는…… 그 액수는 제가 다 따져보지 못해서 저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혹시 교육부에서 확인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시·군·구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약 2000억 정도 됩니다.

○이인영 위원 만약에 모든 시·군·구에서 다 3%를 달성해 가지고 확보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까지는 정확한 추계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재정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확대하기 위한 관심이나 노력들이 없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말로만 2월부터 한다고 하고 장관이 말씀하시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한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제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교육재정 확충방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재원이 1조 8000 정도 되는데 부지단가를 낮추어서 그중에 9000억 정도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교육세가 금년 말에 끝나는데 5년간 연장 완료해서 여기에서 연 2조 4300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1000억 이상 정도의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부분을 시·도교육청을 평가해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일반 지자체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런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이 가져오게 하는……

○이인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얼마냐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나름대로 그동안 꽤 많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인영 위원 차관님, 그 자료를 주시지요. 주시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을 얼마만큼 늘리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여타의 동원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절대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BTL 문제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오늘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절대 액수의 확보, 양적인 확보 문제 못지않게 질적으로 예산의 구성이나 내용 편성 이런 것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복지, 평생교육, 교육안전망, 교육격차 해소 대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은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나 오늘 검토한 것을 보면 사실상 아직도 이런 영역들의 문제를 교육정책의 주변부, 변두리 이런 데에 놓고 중심부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하려는 의지가 작아 보입니다. 사업배치에서부터 예산편성, 인력동원에까지.

그런데 이 문제는 내일 소위도 있고 해서 만들어 오시지 않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오늘 내일이라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꾸 방치할 영역도 아니고요. 이미 연구 결과들도 나온 것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국감하면서 보니까 공교육 내에 들어와 있는 비용들이 1개 시·군·구 단위에서도 학교마다 4배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시·군·구 간의 격차가 4배씩 나는 곳도 있는데, 사교육에서 격차가 8배로 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공교육 내에서…… 과학적인 검증기준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했던 수치를 보면 4배씩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제안하고 싶은 것인데요.

제가 국감 마무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격차가 이렇게 심화될 때 일정한 격차, 2배 내지 3배 이런 격차가 날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티스하고 그것이 매해 점검되면 일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발동되고 예산이 뒷받침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특별교부금이 보정하는 쪽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데 단순히 시설 투자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특별교부금에서도 질적인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내년에 교육부에서 주력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을 다른 데에 비해서 비중 있게 투여하고 싶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교육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 초·중등 쪽에서 주로 교육복지 부문, 양극화에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격차 문제에도 역점을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교육격차해소위원회도 만들고 TF팀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대학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과 관련되기 때문이 그쪽도 신경을 써야 되

고요.

다만 그런 가운데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염출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격차 내지는 양극화 해소 이것이 1번이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대학에서는 뭐라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학에 대한 투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중등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대학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NURI사업이면 NURI사업의 성과, BK21사업이면 BK21사업의 성과 아니면 구조조정이면 구조조정……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 사업 명을 얘기하자면……

○이인영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BK21사업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인영 위원 보충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위원 교육부 간부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BK21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단계에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2단계에 3000억 원을 배정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1단계의 지원성과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있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형태로 평가를 해 왔습니다.

○임태희 위원 주로 연구원들 인건비 지원 성격의 자금이 많았는데 지원받은 학생들이 지원받고 나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 혹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도로 당초 지원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곁들여서 했나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예,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BK21기획단장 엄상현 예, 매년 사업단으로부터 연차 보고를 받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위원장 황우여 답변하시려면 관등을 얘기하시고 하셔야 속기가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BK21기획단장 엄상현 예, 알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세요.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교육인적자원부BK21기획단장 엄상현 예, 그러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자료는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BK21기획단장 엄상현 BK21기획단장 엄상현입니다.

○임태희 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방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료를 받아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그 내용은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원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같은 것도 물론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연구중심 대학원의 육성으로 목적을 설정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받고 졸업하고 나서 각자 취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장학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성과가 연구원 개인에 대한 보조는 될지언정 이것이 국가적으로 지원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선 1단계 지원 규모가 연간 7900명이었는데 2단계 지원대상 규모를 1만 5730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재정을 조달해서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국민 세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우리 학

생들의 경우에도…… 예산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억 했으니까 올해는 그것 대비 몇 % 증가시키고 1단계에 7900명이었으니까 2단계는 이것보다 좀더 늘려야 되고 1단계보다 2단계는 당연히 늘린다 이런 형태의 예산 집행은…… 더군다나 성과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연간 지원규모나 지원분야에 대한 것은 1단계 규모를 유지하는 정도로 하면서 그 성과를 평가해 가면서 정확한 평가가 나올 때 성과가 확실히 나는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1단계 수준에서 동결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에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워크 스터디(work study)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고 싶은데요.

워크 스터디가 전문대학생만 지원하고 있는 것 맞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임태희 위원 이것은 취지로 보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자금 융자 이런 것보다 이 워크 스터디의 취지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근로기관에서 실업예산을 쓴다고 하면서 대학생들 데려다가 봉걸레 들고 다니면서 청소나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실업예산 투입해 주고 하루에 몇 시간씩 와서 근무하고 청·장년 실업률 떨어졌다 하는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주로 전공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임태희 위원 담당 책임자가 어느 분이세요?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국장 하갑래 평생학습국장 하갑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결국은 그냥 학교 도서관이나 실험실습실 같은 데서 근무하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자기 개발과 함께 일하면서 공부하는 장학금 성격의 예산으로 활용되면 좋은데 현실태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잘 활용이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지요?

○교육인적자원부평생학습국장 하갑래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위원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목적에 맞게 한다면 이것은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한 예산이라면, 예를 들면 바른 쪽으로 장학금이 돌아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아이디어는 학신보에서 하는 대출보다는 이런 형태의 예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실업 예산 낭비하듯 그렇게 쓰지 말고 학교에다 투입해서 쓰는 거니까 필요하면 4년제 대학생한테까지도 이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태가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하니까 조사된 내용들이 지금 없는 것 같고, 학교에다가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동사무소나 행정기관에 가서 근로하면서 실업예산 집행하듯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집행되는 것 같은 답변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도 소위원회에서 따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그리고 만 3세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은 앞으로 국가에서 대폭 확대해서 가능하다면 정말 이 부분은 국고에서 담당해 줘야 앞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도 출산 이후의 육아에 대한 부담도 덜어 주고, 이것이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이라기보다 예산 확보만 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이런 것들은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증액시켜 놓은 예산 내용을 보면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그리고 3, 4세아 교육비 지원이 2006년도에 상당한 규모로 늘어났어요. 만 5세아 교육비의 경우에 641억에서 1168억으로, 3, 4세아 교육비의 경우에는 163억에서 775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지자체의 자체 부담을 겸해서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5 대 5 사업입니다.

○임태희 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마 재정 기반이 취약해서 이것에 제대로 호응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재정이 아주 튼튼한 데는 이것 100% 소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재원 여력이 되면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해야 될 과제이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봐서,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어려운 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배정하실 때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라는 규정 때문에 이것을 이행 못 하는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배분 기준을 지금 교육부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시·도별로 예산을 지원하면 시·도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태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데는 한 7 대 3으로 줄 수도 있게 하고 아주 좋은 지역에는 자체 부담 비율을 더 높이게 하는 정도의 조정은 교육부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실무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저는 그렇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지를 점검하면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점검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대해서 소위원회에서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걱정인데 내년도 예산 들어온 것을 보니까 여유자금 회수분이 496억 있습니다. 이 부분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초반기에 너무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유자금 회수 부분이 학신보가 이차 보전 예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남은 예산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 그게 있다면 정부 내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금년 수준 정도로 유지해 가면서 안전장치를 정확히 마련하시고, 필요하다면 감채기금 형태로 수익성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두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이 제도가 존속하고 또 이 제도를 앞으로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나중에 재원이 부실해질 것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뜻에서 규모를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금년보다 안 늘리면 문제 생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고 교육부 총리님도 한 번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전문 컨설팅 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감독 차원에서 건전성 내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셔서 보완 조치를 마련한 후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서라기보다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마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것을 다져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 추가소요 전망치를 보면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교육부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는 약 3조 6000억, 2007년에 4조 2000억, 2008년 5조 4000억, 2009년 6조 3000억 이렇게 잡아 놨는데요.

이 기준이 지금의 교육 환경,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의 질의 정도 이런 것들을 현상 유지하는 정도로 예산을 추정한 겁니까, 아니면 좀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뭔지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구논회 위원 교육부에서 교육재정 추가소요 추정치 전망을 내놨거든요.

2006년에서 2009년까지 약 19.5조 원의 추가소

요 재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보셨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이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사업을, 정책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구논회 위원 이게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의욕적으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의욕적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의욕적으로 잡은 겁니다.

○구논회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욕적으로 잡은 게 아닌 것 같아서…… 2006년도 추정치를 3조 6000억 정도로 잡아 놓은 것 같은데, 내년도 유아교육이라든지 고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의 발전 단계로 보아서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 5조 이상 정도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3조 6000억 가지고는 올해 수준의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의 추정치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내년 예산 같은 것은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준들은 적어도 기획예산처라든지 정부 부처와의 예산 싸움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근거 있는 추정치를 만들어서 그쪽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학계에서는 보통 5조 이상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약 3조 6000억 정도를 잡아 가지고 그쪽하고 협상하면 불리한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 소요 예산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구논회 위원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안들을 개정해야 될 텐데요, 우리 교육부 소관으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타 부처 소관 법안들도 꽤나 많거든요.

행자부에서는 택지개발제한구역의 용지구입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방세법이나 교육세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산자부에서는 교육용 전기세 인하 문제, 그다음에 재경부에서는 교육세 연장과 관련해 가지고 교육세법이나 지방세법 개정……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처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됐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합의를 했습니다. 학교 부지에 관한 부분도 합의가 되었고 교육세 연장하는 부분도 합의가 되었고요, 다만 행정자치부와 관련되는 지방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적극적으로 임해서 차질이 안 생겨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한도의 우리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들인데 이것이 개정이 안 되면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BTL사업들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저도 그동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었는데 이제 시행 단계에 들어갔고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하나를 짓는데 약 15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 6% 정도의 수익을 보전해 주고 1억 5000만 원 정도의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계획이 짜여져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그러면 이 6%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리보(LIBO)금리에다가 약 1.2% 정도의 추가금리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5년마다 한 번씩 연동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일선 학교나 일선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것의 2분의 1 정도면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 6% 수익을 보전하고 또 관리비 면에서 한 학교당 연 약 7000~

8000만 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 이 BTL사업을 차라리 채권 발행을 해서 쓴다면 그만큼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약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당장 정부 부담이 상당히 있지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지만 이게 전부 BTL사업으로만 끌고 갈 것이냐 BTL사업을 줄일 것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초·중·고 시설에 대한 BTL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지방교육재정의 한계 때문에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학교를 개보수하려면, 지금과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증가율 가지고는 개보수하는 데만 적어도 20년, 30년 걸립니다.

이것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BTL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구논회 위원 물론 경기를 부축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의 밀려 있던 사업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학교를 세우고 해야 될 미래의 사업들까지 끌어들여서 앞당겨서 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래에 해야 될 사업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BTL사업을 적용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금리 부담에다가 관리비까지 추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는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 교육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BTL사업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것인지…… 차라리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우선 쓰는 방식 아니면 정부 보증 방식으로 해서 차용해서 쓰는 방식이 비용이 절약될 것 같다는 주장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우리가 처음에 초·중·고에 대한 BTL사업을 정할 때 그런 수익률을 감안하더라도 길게 보면 앞으로 어차피 지을 학교 신설의 경우 또는 개보수 시설의 경우 교육시설 개선을 훨씬 앞당겨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좋은 교육 여건을 베풀 수 있다, 그런 관점하에서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엄격히 심사해서 한 13조 6000억 규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 범위 내에서는 크게 변동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약간 비켜서 답변을 주시는데요.

아무튼 교육 재정에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과연 BTL사업을 늘려 나갈 것인가, 13조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보고 차라리 그중의 일부라도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6% 이자나 수익금을 주는 것보다는 4.8% 기채 발행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물론 당장은 국민들한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관리비도 일선 현장 교육청에서는 약 7000~8000만 원이면 학교 하나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는 1억 5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현재 이 1억 5000만 원도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교육부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연 6% 수익과 1억 5000만 원의 관리비를 준다고 해도 건설 위험이라든지 운영 위험 또는 재무 위험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낮은 수익률로 과연 민간 참여가 일어날 것이냐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2조 1000억 정도를 교육 분야 BTL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이지요? 이것 다 채워졌습니까? 참여 기업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BTL 사업을 시작해서 그것이 결국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한 1조가 줄었습니다만 당초 의도한 대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당초에는 3조 1000억을 계획했다가 2조 1000억 정도로 줄여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1조 부분은, 대개 소규모 사업 이런 부분은 BTL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하자는 것이 시·도교육청별로, 또 의회의 승인 과정에서 조정된 숫자

입니다.

○구논회 위원 그러니까 2조 1000억 원은 다 쓰일 수 있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구논회 위원 교원공제회 이사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안 계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연 6%의 수익 보전하고 관리비에서 일정 부분 남는다고 한다면 연기금에서 SOC 투자하는 대신 BTL 사업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이 됩니까?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지금의 금리나 투자 수익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도 두 군데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해서 재무적 투자로 참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건설 단가 면에서 조금 다른 데보다 밀려서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못 되고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발주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건설사하고 하든 간에 자금은 우리가 댈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번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러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이 정도 낮은 수익률로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맞지 않는군요.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군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예, 그렇습니다.

○구논회 위원 알겠습니다.

차관님, 어차피 교육과 관련된 BTL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면 교육 관련 연기금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민간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충분히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구논회 위원 그리고 이공계열 대학생 장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 9월 15일 교육부총리하고 과학부총리가 협약서를 체결해서 아마 과기부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사업분부터 이관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내년도 사업분부터입니다.

○구논회 위원 저희가 동안에 꾸준히 지적해 왔던 것이, 그동안에 이공계 장학금 지원 사업이 고교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으면 상위 8개 대학에 약 75% 정도가 지원되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기보다 이공계 전체에 붐을 일으키고 또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공계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 장학금 주기 위한 형태로 변질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주장하기는 약 50% 정도는 성적순으로 지원하더라도 약 50% 정도는 성적이 아닌, 지역에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서 그 지역 내에서 선발해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죽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과기부로 사업이 이관되다 보니까, 이관은 됐지만 교육부에서 과기부와 협의 과정에서 이런 정책을 좀 살려나갈 수 있는지를 묻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사업을 과기부에 넘겼지만 장학금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 부가 참여합니다. 참여해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아까 차관께서 우리나라 대학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OECD의 절반 수준이다, 그

러셨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진수희 위원 이것은 교육부 예산으로 투입되는 규모만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처에서 대학으로 가는 돈까지 같이 계산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 부처가 투자하는……

○진수희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교육부 예산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가는 것까지, 전 부처에 걸쳐서 대학에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추계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지요?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본질의 때 유아교육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계획에도 보면 내년 예산에는 전혀…… 계획으로 농·산·어촌, 유치원 교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전체 교사들에 대해서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면 상징적으로라도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죽 보아도, 아마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소위할 때 학급 담임 수당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으니까 교육부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고등교육 예산, 유아교육·평생교육 예산을 보면서 도대체 교육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문제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예산에 반영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안 보여요.

유아교육 0.7%, 평생교육 0.1%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전혀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유아교육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장애아하고 관련된 것을 보면 사실 04년도 예산 결산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를……

장애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이 충분하지 않으면 돈은 있지만 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부총리께서는 세부 권역별로 실태를 파악해서 특수시설을 갖춘 유치원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안에도 보면 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만 되어 있고요.

27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 확충 없이 무상교육비 지원만 잡혀 있으면 이것이 늘어나면 또 늘어난 만큼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하고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명시가 됐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방과 후 교실하고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방과 후 교실의 순기능에 관해서는 이미 다들 동의하시고 또 여러 차례 강조가 됐고요.

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러셔서 저와 조배숙 위원님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느라고 법안까지 발의하기도 했는데 정작 이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단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 전체 예산을 보니까 고등교육 예산은 구조조정이 좀 되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유아교육·평생교육·방과 후 교실 이 부분은 좀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대학에 투자하는 예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이나 적정성·타당성 검증을 철저히 하고 해야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몇몇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왜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을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이것 다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이러면 사실 국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혁신 운영 지원하고 관련해서 세부 사업을 보니까 다 기본사업비 성격의 예산들인데 이것을 왜 주요사업비로 편성합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특히 다른 부분은 교육부의 업무 환경 개선상 꼭 필요하다고 해도, 여기 보니까 이상한 항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대학시설 공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과 시설비 10억 원,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시설 공간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 즉 연구용역으로 4억 원 그다음에 대학시설 공간비용 채산제 시범 적용 시설비 6억 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대학시설에 대해서 공간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면 각 대학마다 건축과·토목과 전문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별로 하면 되지 별도의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소위 차원에서 좀 세심하게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BTL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사학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기금 고갈하고 관련된 부분, 또 부동산 간접상품 투자와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세입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 내지 과학성을 제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새로운 어떤 모형·모델 이런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그런 새로운 모형이나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처하고 세입 규모를 정할 때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해 내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내년 같은 경우는 당초의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 한 1800억 정도 감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과대 편성되는 현상은 막도록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역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산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해 내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육 예산의 과학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교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출범시키든 그 자체의 비용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아예 차제에 여태까지 교육 예산이나 교육 재정, 결산 이런 것을 해 오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군·자치구에서 교육경비 보조를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19.4% 문제들을 다시 손대서 아예 실링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문제라든가 그 외에도 아까 임태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에도 대형 투자 비율을 탄력적으로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교육세 세율을 100분의 50까지인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권장하고 잘한 부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이런 것 말고 또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교육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을 늘리면 좋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도·자치단체부터 전입 늘리는 것, 각종 세법을 개정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예산에 계상된 것만 주는 것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은 없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의논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은 더 연구해서 같이 해결하

시고요.

내일부터 소위를 해야 되니까 교육 안전망과 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28억이 전액 반영되지 않은 이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15개, 20개, 30개, 40개 이렇게 계속 되는데 과연 지금 책정해 놓은 올해 15개, 내년 몇 개, 후년 몇 개 이런 것은 고정된 것인지,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늘릴 수 있는 범위가 몇 개까지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나 교원복식수업, 순회교사 수당 신설, 이런 정작 필요한 부분들은 다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U-러닝 학습환경 구축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려고 했다가 아예 빼버렸는데 왜 그런 것인지, 국가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DB구축 사업을 매우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다 빼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54억 정도 증액 요구됐었는데 전액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초·중 학력인정 표준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3억이 책정되었다가 아예 다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해서 내일 주시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의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주 간단하게 5개 제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충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신축공사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었기에 다 배제되었는지, 충북대병원의 수술장비 확충과 관련한 예산 책정·1일 수술센터가 배제된 이유, 충북 지역 대학의 방송통신대학 신축사업비 다 배제된 것, 서울대 법과대학의 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배제된 것,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 사업에서 부족액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일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고등학교 실업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 않습니까?

이양되고 나니까 지방 교육청에서 실업계 교육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들이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할 때와 비교해 볼 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지병문 위원 그 대책은 세우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중·고 예산은 시·도에 권한 이양과 동시에 사업도 위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국가 예산에서 일부를 반영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너무 지나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에 제약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 이양 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정책 지침을 통해서, 중요한 방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병문 위원 결국은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문제는 2005년 5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중등 단계의 직업교육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매년 495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2006년 예산에 보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지방 이양사업으로 하고 2006년도 예산에 실업계고 체제혁신지원사업이라고 30억을 계상했는데 국립공고인 전북 기계공고, 구미 전자공고, 부산 기계공고 이 3개 공고에 23억 6000만 원이 배분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6억 4000만 원만 국고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 이양해 놓고 보니까 지방교육청들은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결국은 정부가 고교 실업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사실은 정부가 전문대학을 많이 만들어 놓고 준칙주의 해 가지고 마음대로 풀어 놓고…… 전문대학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전문대학으로 가니까 결국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방향을 잃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훨씬 높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국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은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실업고 문제는 그간에 고민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고가 한 720여 개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실업고도 나름대로 구조조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병문 위원 특성화도 해야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사회 수요에 맞게 줄여 가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한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려가는 노력이 같이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병문 위원 하여간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물론 법안이 통과되어야 고등교육평가원이 만들어지기는 하는데—고등교육평가원을 보니까 운영비·인건비 해 가지고 많이 편성되어 있고 직원도 원장을 합쳐서 한 55명 됩니다.

그런데 고등교육평가원의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이전이 35억 있는데 이것이 세목으로 들어가면 대학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학문 분야 평가, 대학 종합평가, 전문대학 학과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이전이라고 하면 고등교육평가원이 어디에 다시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기본적으로 고등교육평가원은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예산을 출연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들면…… 정부기관이 아닌데 왜 인건비가 다 들어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출연기관이 되니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만 그 자체를 국가기관으로서 설립할 생각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병문 위원 그것은 우리가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데, 제 얘기는 고등교육평가원이 만들어지면 평가원의 일상 업무가 평가인데 평가에 필요한 예산이 왜 또 별도로 서느냐 이것이에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새로 신설되는 평가원은 어떤 경우에 업무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민간기구의 평가원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원에서 민간기구의 인증 형태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분야별로 민간 전문기구에 맡겨서 하고 그래서 평가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지병문 위원 그러려면 뭐하러 만드느냐는 질문이 당장에 나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우리가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지금 왜 대학에 대한 평가를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자율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독립된 평가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병문 위원 하여간 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가 법 심의하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논회 위원 제가 국정감사나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줄곧 학생 비만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통계를 자꾸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 종합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미국의 경우는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120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독일은 약 100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아마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금도 감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감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금년에야 비만 문제를 질병으로 규정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어떤 체계적인 방법에 의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한번 없다, 이것은 학생 건강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고 본 위원도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학생 건강검사를 제도화하고 국가 차원의 어떤 표본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의료계나 현장 교사 또는 공무원 등이 약 1만 2000명 정도의 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하게 될 경우에 약 3억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배정해서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라도 먼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480개 표본 학교에서 한 12만 명의 신체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비만도는 키와 몸무게를 단순하게 조사하고 있어서 체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논회 위원 이 예산을 좀 책정해서 내년도부터 한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시지요.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선입견이냐 하면, 장애인은 우선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은 못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같이 마음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편견들이 바로잡힐 때까지 장애인을 위한 교육사업은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특수교육진흥법이라든지 여러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교육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성인 장애인들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장애인 야학이 작년에 전국에 약 14개 학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교육부장관께서 먼저 정책사업으로 하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랬는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당장 2005년에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 한두 군데에 30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것도 정책적으로다가 지원을 좀 해 주시고 빨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이……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평생교육법을 전면적으로 손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영해서 개정작업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내년도 정책사업으로 작년도만큼만 우선 지원해 주시지요. 왜냐 하면 장애인 야간학교 같은 데는 정말 몇천만 원만 가져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은 계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그다음에 한국어능력검정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97년도 시행 첫 해에 약 2600명이 응시를 했고 올해는 약 2만 6000명으로 약 10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류열풍을 타고 동남아시아에서는 더욱 더 한국어능력검정시험들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들이 교육부 주관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또 노동부 주관의 한글학회에서 시행하는 세계한국말인증시험 또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고용허가제한국어시험 등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관부처를 일원화하고 시험시행기관을 통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서 통합관리를 좀 하시지요. 예산도 좀 확보를 하시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관계부처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토플이나 토익, 물론 성격은 다름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논회 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도 중복투자가 되고 또 업무 효율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공신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저는 본질의 때 주로 삭감을 해야 되는 쪽으로 질의했는데 이번에는 좀 증액하는 쪽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계교육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5월 교육혁신위에서 특성화고 확대 및 자율학교 지정, 실업계 교육과정 개편 및 통합, 이렇게 해서 혁신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6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95억을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30억뿐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혁신위와 교육부가 서로 이런 협의가 잘 안 되어 갑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그 필요한 예산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고예산에서 얼마를 반영하고 또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얼마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히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잘 안 되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중앙정부사업으로 오히려 환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기본적으로 초·중·고에 대한 예산이나 교육은 어차피 시·도교육감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거의 상당 부분 교부금으로 총괄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전액을 반영하는 것은 전체 국고예산에 있어서 또 부담을 가져오기 때문에 모두를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실업계 교육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만큼 저는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지방 이양해서 지방에 맡겨놨을 때는 지방에서는 이런 것들의 중요성, 이런 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있어서 부처간에 보면 농특회계 예산이 총 2조 7785억으로 잡혔는데 여기에는 교육예산은 1.55%밖에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공약과는 달리 오히려 농촌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이지 않나 싶은데요. 82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7월 현재 폐교가 전국에서 3000개가 넘게 되어 있고 2009년도까지 287개 자체를 폐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2009년도까지 100명 이하를 폐교할 경우에는 1965개를 폐교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 떠나는 농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농어촌 지역의 과소 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달리 보이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모순된 게 뭐냐 하면 농어촌 통폐합 하면서 폐교를 하면서 통학버스, 하숙비, 기숙사비를 지원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통학버스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모순된 것 아닌가, 이것을 폐교하면서 또 통학편의를 제공하는 20억 전액이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농어촌의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농어촌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특성화, 이런 것을 살려줌으로 해서 오히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기본적으로 농어촌 학교는 농어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과소 규모의 경우에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동시에……

○최순영 위원 그런데 통학버스까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농어촌에 대한 교육계획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 교육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요구안은 242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기획예산처에서 깎여서 113억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42억으로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장애인 교육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결국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에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본질의 때는 주로 전시성 삭감보다, 오히려 이런 복지쪽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을, 그쪽에 삭감하고 증액을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희 위원 우리 차관님, 지금 예산서를 제가 죽 보니까 민간경상이전 지원 하는 것 있지요? 지금 그게 한 테이블로 다 나와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자료 만들 수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나가는 민간경상이전에 대한 항목…… 전산작업 하면 금방 뽑을 수 있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자료를 금방 뽑을 수 있는지 한번……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재정기획관 황인철 들어가서 작업을……

○임태희 위원 한번 어느 단체에…… 아니면 그 지원대상하고 전체금액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관심 있어서 보니까 도저히 작업을 뽑을 수가 없네요. 그것을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이전의 지원대상하고 지원명목이 뭔지 해서 조금 뽑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제하인물단체연구 있잖습니까? 지금 4억 지원되는 게 보니까 몇 년까지이지요? 내년까지인가요? 내년 예산 하면 다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일제하인물단체연구라고 해서 4억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재정기획관 황인철 재정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임태희 위원 2007년까지 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정책홍보관리실재정기획관 황인철 예.

○임태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재정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것은 국사편찬위에서 용역 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자료조사는 조사인력 같은 경우 아마 좀 쓸 텐데 예산이 조금 남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많이 남아 있던데……

금년에 이게 몇 월 잔액인지 모르겠는데 4억 중에 1억 6000밖에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를 나중에 설명자료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혁신운영지원이라고—세항 1714, 213— 64억 7000만 원 반영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주로 감사관실 운영인데 이게 어디 다른 데 건물 얻어 나가면서 생기는 비용입니까?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현재 감사관실이 사무실이 비좁아서 밖에 나가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지금 나가 있나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서 썼나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다른 재원으로……

○임태희 위원 다른 재원으로 돌려썼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감사관실이 혁신위원회가 있던 사무실이 옮기면서 물려받아 쓰고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혁신위원회 사무실에?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임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은 교육부 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신위원회 사무실을 비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밖에 나가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바깥에 지금 나가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바깥에 나가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그러면 상황은 똑같은 것인데 왜

추가로 예산이 증액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금년에는, 원래 교육혁신위원회가 건물임대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혁신위원회가 정부 별도 청사로 옮기면서 그 예산을 사실 이어 받아서 감사관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임태희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혁신위원회 금년도 예산이, 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은 17억에서 14억,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난데없이 지금 65억이 늘었다 이 말입니다.

건물임대료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많이 나가지요? 감사관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기획감사담당관 김호근 저희 감사관실은 전체가 43명인데요. 민원조사담당관실, 콜센터 빼면 밖에 나가 있는 인원은 약 30명이 나가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그 30명 인원 나가는데 건물을 65억을 쓴단 말이에요?

○위원장 황우여 지금 답변하신 분의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기획감사담당관 김호근 기획감사담당관 김호근입니다.

○임태희 위원 한번 자료집을 내 보세요.

○교육인적자원부기획감사담당관 김호근 저희 감사관실 자료를 별도로……

○임태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얼른 예산서를 죽 살펴보면서 좀 납득이 안 가서 내역을 보니까 더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 참고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4억이라는 예산이 감사관실만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여러 항목으로 합계된 예산금액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행정혁신은 상시 혁신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난데없이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왜 65억씩 예산이 붙나 저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감사관실 건물임대료더라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항상 교육부가 감사관실 인력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대부분 감사관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의 막아서 지금 활동하는 것 아닙니까, 현장 방문해서?

그러면 상시 사무실 주거 인원이 책상은 갖다 놔야 될 테니까 있다 하더라도 한 30명도 안 되는 감사관실에서 무슨 건물을 빌리게 65억 돈이 나가느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자료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전국 16개 교육청에 국·공립유치원이 있잖아요? 그중에 98%가, 그러니까 4336개가 됩니다. 그 4336개가 초등학교에 설치된 병설유치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차관님?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병설 유치원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병설유치원은 겸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초등학교 교장이 겸임하지요? 원감은 교감이 겸임원감이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당이 교육공무원법에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수당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는 교육청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곳이 대구교육청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대구교육청이 원감, 원장, 그다음 행정실장한테 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겸임원장한테는 월 3만 원, 겸임원감한테는 월 2만 원, 행정실장한테는 월 2만 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는 대구교육청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수당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위학교 초등학교 교장이지만, 그 안의 유치원도 엄연히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2개의 교육기관인데, 유치원이 하나의 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의 모든 것이, 학부모 연수라든지 입학식도 따로 하고, 졸업식도 따로 하고, 학생 모집도 따로 하고, 또 연수도 따로 하고, 교육계획서, 유치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모든 것을 따로 합니다.

그런데 불만이 대단해요. 이렇게 2개 기관이라서 그 기관에 가는 것을 사실 교장들이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리다 보니까 책무성은 더 많고, 그 아이들이 바깥에서 유희를 할 때 거기 가서도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데 행정실장이나 이 세 분들 보수랄까 수당이랄까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을 간고했는데 수당 지급이 현실에…… 주지 않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들이 시·도교육감들한테 수당을 주도록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촉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요, 그나마도 3만 원, 2만 원, 2만 원, 이렇습니다. 액수가 얼마나 참 저거 합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예우 문제가 있는데 상응하는 예우수당도 주면서 이것을 책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7억 원으로, 지금 현재 대구교육청처럼 하니까 37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37억은 너무 또…… 3만 원, 2만 원, 2만 원이니까 어느 정도 상응하는, 원장과 원감과 행정실장의 위신은 그래도 해 주고 책무성은 부여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관계부처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겸직수당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겸직수당을 지급하는 규정, 근거와 관련해서 중앙인사위원회나 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년도에 실시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보십시오.

○이주호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현재 정부 계획에 의하면 2010년까지 모든 중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예산안을 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 실과 협조해 가지고 그 예산 부분은 정정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님, 어떻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그치기로 하고, 이제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수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심사를 마치셔서 오는 8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서는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최재성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한화갑 위원님, 이주호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임태희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진수희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지병문 위원님, 구논회 위원님, 최순영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또는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와 답변 내용 모두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비한 유아교육대책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질의 시간에 정책질의와 아울러 함께 질의를 해소하신 것으로 파악되므로 달리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 예산은 숫자로 표시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또 보다 현실적인 정책의 실현 방안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충실한 심사를 거쳐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지 않는 훌륭한 예산안을 짜 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구논회	권철현	김영숙	백원우
유기홍	이군현	이인영	이주호
임태희	임해규	정봉주	조배숙
지병문	진수희	최순영	최재성
한화갑	황우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전문위원직무대리	구기성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차관	김영식
차관보	김광조
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학교정책실장	윤웅섭
인적자원정책국장	김경회
평생학습국장	하갑래
대학지원국장	김화진
학교정책국장	류영국
지방교육지원국장	박경재
국제교육정보화국장	이병현
감사관	김왕복
기획홍보관리관	황홍규
재정기획관	황인철
대학혁신추진단장	곽창신
BK21기획단장	엄상현
정책보좌관	홍국선
비서실장	김응권
유아교육지원과장	박영숙
기획감사담당관	김호근

○기타 참석자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노일숙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종서
국제교육진흥원장	나종화
국립특수교육원장	김용욱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김정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본부장	이승환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윤덕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민동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권영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이기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김학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황대준

【보고사항】

○의안 회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8 지병문·김태홍·백원우·최철국·최재성·이군현·강기정·이목희·염동연·양형일·이주호·김동철·정봉주·구논회·최순영·제종길·이인영·유기홍·임태희·조배숙 의원 발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병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8 지병문·김태홍·백원우·최철국·최재성·이군현·강기정·이목희·염동연·양형일·이주호·김동철·정봉주·구논회·최순영·제종길·이인영·임태희·조배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일 회부됨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8 백원우·지병문·정봉주·이인영·최성·오영식·한병도·조정식·김부겸·우상호·구논회·이계진·우제창 의원 발의

11월 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05. 10. 28 우상호·양형일·정의화·노웅래·박기춘·심재덕·우제항·이상열·정두언·최인기·김효석·이성구·엄호성·김정

부・박재완・김애실・이종구・정병국・김양수・김영덕・김선미・신학용・이상경・제종길・장복심・오영식・강혜숙・조성래・김부겸・우윤근・배일도・고조흥・신상진・김정권・서재관・박상돈・이강래・김교흥・주승용・박찬석・노영민・원혜영・김동철・이인영・김영춘・박병석・이계안・이영호・홍미영・강기갑・이낙연・한화갑・최순영・김혁규・조경태・이근식・김현미・김태홍・유승희・최철국・이호웅・양승조・안영근・최용규・이원영・조성태・서혜석・김종인・정몽준・김춘진・임종인・홍재형・김덕규・한명숙・유시민・유인태・문희・박찬숙・이경재・정문헌・박계동・박성범・이재오・이성권・김석준・김희정・한선교・안홍준・이상배・김광원・이계경・고경화・허천・김태환・이인기・김충환・김문수・정희수・이진구・유선호・노현송・이정일・김재윤・서갑원・김희선・김성곤・신중식・박명광・최재천・정동채・배기선・김한길・김영주・김홍일・강창일・염동연・최규식・정청래・이광철・김재홍・안민석・민병두・임종석・신계륜・김원웅・김낙순・정의용・윤원호・이종걸・홍창선・변재일・김태년・송영길・이목희・김종률・윤호중・정봉주・백원우・최재성・유기홍・지병문・구논회・조배숙・임태희・강기정・장향숙・문병호・이석현・박영선・이미경・김형주・정장선・임인배・정갑윤・최규성・한병도・이경숙 의원 발의)

11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조선대학교 해직교수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청원

(2005. 10. 28 경기 하남시 춘궁동 406-1 권광식 외 67인으로부터 백원우 의원 외 15인의 소개로 제출)

11월 2일 회부됨